

연구보고서 2021-05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이소영

최인선·정은희·이삼식·Anne H. Gauthier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식	한양대학교 교수
	Anne H. NederlandsInterdisciplinair Demografisch Gauthier	

연구보고서 2021-05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02-0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1.05>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인구 현상과 인구조사 데이터	23
제2절 인구정책과 인구조사 데이터	36
제3절 인구패널	48
제3장 인구조사 데이터 사례	61
제1절 국내 사례	63
제2절 국외 사례	88
제4장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105
제1절 인구조사 데이터로서의 인구패널	107
제2절 인구패널의 구축 및 관리 방안	113
제5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9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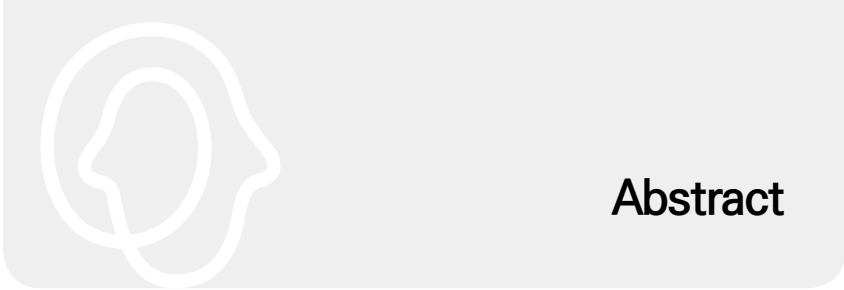
〈표 2-1〉 인구주택 총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26
〈표 2-2〉 인구 분야 국가발전 지표	33
〈표 2-3〉 E-나라지표 인구영역 지표	34
〈표 2-4〉 사회 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35
〈표 2-5〉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 상황'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인구 부문)	38
〈표 2-6〉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 상황'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사회 부문)	40
〈표 2-7〉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	44
〈표 2-8〉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	45
〈표 2-9〉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	47
〈표 2-10〉 2006년까지 도입되었거나 사전 준비 중인 국내 패널조사 유형	58
〈표 3-1〉 출산력조사의 이력	65
〈표 3-2〉 출산력조사의 조사 대상	67
〈표 3-3〉 2018년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기혼 여성)	69
〈표 3-4〉 2018년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미혼 남녀)	70
〈표 3-5〉 패널조사별 개요(2020년 기준)	72
〈표 3-6〉 한국노동패널 자료 구성	76
〈표 3-7〉 한국복지패널 자료 구성	77
〈표 3-8〉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구성	78
〈표 3-9〉 FFS 참여 국가와 국가별 조사 대상	90
〈표 3-10〉 FFS 참여 국가별 표집 단위	92
〈표 3-11〉 GGP 협업 기관	96
〈표 3-12〉 2021년 현재 GGS 참여 국가별 조사 대상 및 표본 추출 방식	99
〈표 3-13〉 GGS 주요 조사 항목	100
〈표 3-14〉 2020년에 추가된 GGS 조사 내용	101
〈표 4-1〉 조사 영역 및 항목	114
〈표 4-2〉 추가 영역 및 추가 항목	116
〈표 4-3〉 2021 현재 GGS 참여 국가별 참여 수준 및 조사 방식	119
〈표 4-4〉 인구패널의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참여 검토 방안	125
〈표 4-5〉 인구패널 도입 방안: 주관기관 및 조사기관 측면	127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3
[그림 1-2] REPRO project model	15
[그림 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조사 항목	26
[그림 2-2] 유엔 인구동태통계체계	31
[그림 2-3] 인구통동태 코호트 DB	32
[그림 2-4] 국가지표체계	33
[그림 3-1] GGP 운영체계도	98



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the demographic data production system

Project Head: Lee, S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to make use of the demographic panel dataset for analyzing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For establishment of the demographic panel dataset, this study has considered some practical ways such as changing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to the demographic panel surveys, participating in the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 to conduct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The purposes of the demographic panel dataset are as follows: to investigate families'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education, economic activity, income and consumption, child- and family care, domestic work, family relationships, health, housing, and demographic dynamics such as marriage, divorce, birth, death, and migration by keeping track of changes of the conditions; to examin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demographic behaviors.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the demographic panel dataset, it is necessary to make intensive efforts not only to design

2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the surveys and to select suitable samples but also to build up a system for maintenance of the original samples.

It is expected that the demographic panel dataset should provide empirical evidences useful for making and evaluating the policies focused on demographic challenges including low fertility, ageing population, and other population trend.

Keyword: longitudinal data, demographic panel dataset, population polic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화, 고착화하고 있음
 - 인구 변화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며, 15년 이상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의 세부적인 목표부터 거시적인 패러다임까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됨
 -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고, 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인구패널 실시를 명시하였으나 아직 인구패널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4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패널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인구패널의 구축 방안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인구패널로 전환하는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유지하면서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GS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실효성 있고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 인구패널의 배경
 -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만혼화와 비혼화 및 저출산 등 새로운 인구 현상이 심화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되었고, 2005년부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 조사들의 조사항목 중 일부에서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 2005년과 2009년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기존 조사항목을 수정해서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패널조사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이 대표적임
 - 이들 실태조사는 횡단적인 조사로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사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 시점 당시의 인구동학적인 상태에 대해 과거 오

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가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즉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패널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사들은 각각 고유한 목적에 기반하여 설계하고, 조사항목들을 그 목적에 맞게 선정 및 배치한 관계로, 그 패널조사를 통해서도 저출산 등 인구 변화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의 주요 패널조사는 내용면에서 인구 현상(출산, 사망, 인구 이동 관련 사항, 가족 형성 및 변화 과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내용적으로 여성가족패널이 인구 현상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인구 현상과 직결된 항목들을 조사 내용에 포함한 패널을 구축하여 인구 현상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인구패널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인구패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수행이 가능함
- 인구패널조사는 인구정확적인 모습(인구 규모, 구조, 분포 등)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구동학적인 사건(혼인, 이혼, 출생, 사망, 이동 등)들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동적인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함

6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 패널조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함

○ 결혼,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요인들의 변화는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간주되는 만큼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특화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사가 설계되어야 함

- 이러한 조사는 인구동학 요인들의 변화가 동적인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등과 강한 인과관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종단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짐

□ 인구패널의 목적 및 역할

○ 인구패널조사는 가족의 교육,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육아와 가족 돌봄, 가사활동, 가족관계,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생활실태와 혼인, 이혼, 출산, 이동,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상황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인구동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동학적인 상황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특성 변화 간의 상호연관성,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인구정책 등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인구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구패널조사의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우리나라 인구동학적인 변화의 특징 및 원인들을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DB(database)를 구축하는 데 활용
- 인구 현상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 가구 등 미래 인구정확적인 요인들의 향후 변화에 대한 가정(시나리오)을 설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패널 실시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인구패널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출산력조사를 향후 패널조사로 전환하는 방법, 출산력조사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인구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 GGS 문항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 4가지 방법을 고려함
- 전문가에게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응답자의 과반이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응답
- GGS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 GGS 데이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구 및 가족 역학의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하며 이해 관계자에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왔음
 - 조사 내용은 GGP 연구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데이터 수

집과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과학적 질문과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질문을 추가함

- 이를 통해 GGS는 인구통계학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 신뢰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종단적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음

- GGP는 국제적·사회적 영향력이 있음.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통계 네트워크인 유럽 인구,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및 UNFPA(유엔 인구 활동 기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GGP 인프라에 참여하여 GGS를 실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각국이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보고, 고유성과 공유된 과제를 식별할 수 있음
- 공통적인 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중앙 통제 팀(Central Hub)으로부터 현장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됨
- GGS 데이터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 높은 효용이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종단적인 조사인 인구패널은 일반적인 횡단 조사와 다르게 고려할 점이 있음
 - 횡단적 조사는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매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 횡단적 조사는 매번 서로 다른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동일한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표본 가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인구패널 담당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구패널 구축 및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1회성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는 패널 구축 이후 표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충분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
 - 패널 손실은 표본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표본의 이탈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모든 패널은 패널 가구원의 사망, 이사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 노령화로 인한 노후화, 장기조사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패널 표본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 패널은 원가구로부터 독립, 결혼, 이혼, 이사 등의 사유로 분가가구가 형성되는데 분가가구를 추적조사하는 것은 다양한 인구 현상에 대한 세대 간 동태적 변화와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10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 분가가구 표본이 축적되면 표본손실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향후 인구패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패널조사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길 기대함

주요 용어: 인구조사, 인구조사 데이터, 패널, 패널조사, 인구패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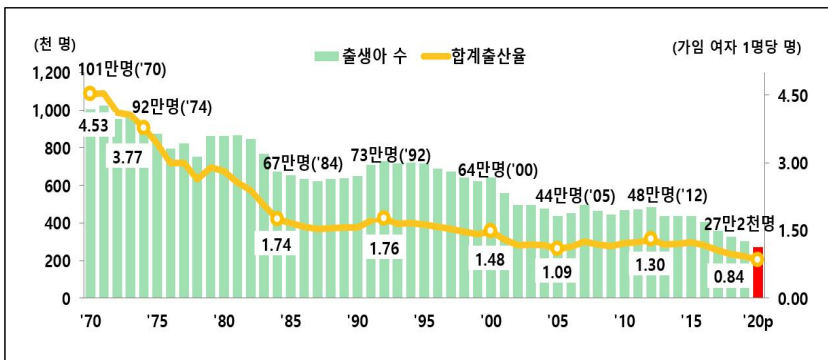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장기화, 고착화하고 있다. 1983년, 15~49세 여성 한 명이 해당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었고, 이후 반등 없이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인다. 특히 2005년에는 1.08명으로 2000년 들어 가장 최저 수준이 되었고,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악화하여 매년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84명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 통계, p.1.

[그림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0년에는 60만 명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 이상이였다가 2017년부터 30만 명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의 출생아 수 역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인 27만 2,300명이었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이 되었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15년 이상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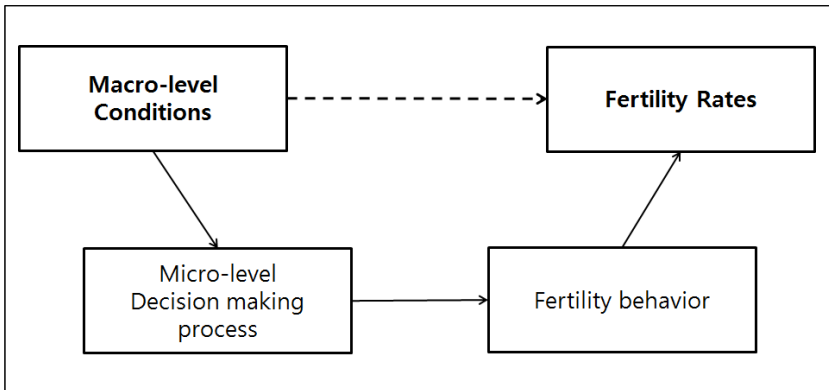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정책은 세부적인 목표부터 거시적인 패러다임까지 변화가 있었으며, 정책은 간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의 생산과 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산, 사망, 이동 같은 인구의 변동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출

산력(fertility)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정책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출산력을 중심으로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하여 일찍부터 분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물론 출산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 결정과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설명 모형으로, 재생산 의사결정의 미시-거시 관점(REPRO: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프로젝트 모형이 있다(이소영 외, 2019). [그림 1-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출산력(fertility rates)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process)을 거친 출산 행동(fertility behavior)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거시적인 조건(macro-level conditions)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Philipov, et al., 2015; Philipov, et al., 2011: 이소영 외, 2019에서 재인용).

[그림 1-2] REPRO project model



자료: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 (20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Appendix ix. p.1 (file:///C:/Users/kihasa/AppData/Local/Temp/BNZ.61d68f4f687347cc/2011-07-15%20217173%201016906%20Appendix_1.pdf에서 2021.12.17. 인출).

이처럼 출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및 거시적 환경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사데이터가 필요하다.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과 인식 및 출산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1964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횡단(cross-sectional) 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출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횡단조사는 정태적 수준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및 의향과 계획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되는 과정 같은 인구동태를 포착하고, 개인의 급변하는 가치관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인구패널 실시를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인구패널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수행된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김종훈, 박종서, 이소영, 최인선, 2018)에서는 출산력 패널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구조사통계자료로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는 인구와 가족 변동(dynamics)과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여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유럽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2004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GGS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유럽, 호주, 캐나다, 홍콩, 대만 등 약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기존 인구조사 데이터를 고찰하고,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패널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인구패널의 구축 방안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인구패널로 전환하는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유지하면서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GS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실효성 있고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인구조사 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2010년 이전에 수행되어 변화된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차,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같은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수행된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김중훈 외, 2018)를 더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조사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구패널의 조사 대상은 전체 인구 집단일 수 있으나 출산이라는 인구 변동 요인이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라는 점과 노후소득보장 패널, 고령자 패널, 연금 패널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패널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

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여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패널조사로 전환하는 방법,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횡단조사를 종단조사 방식으로 전환한 GGS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인구 관련 패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이어지는 장에서 다룰 내용과 연구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 관련 이론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인구 현상에 대한 개념과 인구 현상 파악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통계자료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인구조사와 인구패널의 개념을 정리한다. 특히 인구패널이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과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 인구조사 데이터 사례에서는 인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횡단조사 및 패널조사의 목적, 주제, 기능(역할), 조사 대상, 표본 설계 방법, 조사 방법, 패널 구축 및 유지 방법 등을 고찰한다. 국내 사례로, 내용적 측면에서 인구패널과 유사한 횡단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의 배경, 변화 과정, 문제점과 한계 등을 제시하고, 결혼과 자녀 출산 등 인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국외의 유사 사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구 횡단조사 방식으로 1990년대 말까지 수행된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 FFS) 사례를 분석하고 종단(longitudinal)조사인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인구 관련 패널의 개념, 목적, 법적 근

거, 인구패널의 주제 및 내용, 주요 문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수행 체계 등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인구패널조사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구 현상, 인구정책, 다양한 인구 관련 횡단조사 및 패널조사와 관련된 학술 논문 등 연구자료,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보고서, 국내외 정부 기관의 정책 자료 등을 고찰하고, 인구센서스, 인구동향조사 등을 포함하여 인구 현상 및 인구정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인구 관련 조사(횡단조사 및 패널조사) 사례 분석을 위해 인구 관련 조사의 배경, 주제, 기능(역할), 표본 설계 방법, 조사 방법, 패널 구축 및 유지 방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담당자와 면담한 내용과 관련 웹사이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사례로서 1990년대 실시된 횡단조사인 FFS 사례와 종단조사인 GGS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조사 담당자와의 비대면 심층 면담을 한 것, GGS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패널과 관련된 심층 논의를 한 것을 서술하고자 한다. 추가로 이 연구의 과정에서 전문가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구 현상과 인구조사 데이터

제2절 인구정책과 인구조사 데이터

제3절 인구패널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구 현상과 인구조사 데이터

1. 인구 현상

인구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¹⁾를 의미한다. 인구학에서 말하는 인구는 넓은 의미에서 ‘인구집단’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좁은 의미에서 ‘특정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가리킨다. 특정의 속성은 인구 속성 또는 인구학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속성은 출생, 사망, 혼인, 이동이다. 좁은 의미의 인구는 과거에 대한 확정 인구와 향후의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한 추계인구로 구분된다.

한편, 한 사회 또는 국가의 적정 인구(optimum population)란 ‘그 사회 또는 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 경로(구성열, 2005, p.1)’로 정의된다. 즉, 인구 총량과 여타 정치·경제적 변수 간의 조화를 가져오는 인구의 총량으로서 토지 대비 인구 등의 경제여건, 국방, 안보, 통치범위 등을 고려한 인구의 절대적 규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생산할 것 중 최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적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이에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1. 11. 30. 인출.)

따라 적정 인구의 최종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인구 현상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인구의 집합적인 특성을 말한다. 인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한 시점에서 인구를 연구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인구의 이동, 변화, 혹은 추이를 보는 동태적인 분석 방법이 있다. 정태적인 분석 방법은 전체 인구의 규모, 성별, 연령에 따른 구조와 지역 분포 같은 특성을 통해 인구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태적인 분석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이에 따른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의 변화 같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변동은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생과 사망과 이동은 인구의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결혼과 이혼을 포함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은 핵심 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구 변동에 영향을 준다(권태환, 김두섭, 2002, p.9).²⁾

2. 인구조사와 인구 지표

여기서는 인구패널의 필요를 점검하기 위해 인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즉 한국에서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생성하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인구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구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식통계는 정부에 의해 생성되고, 정부기관과 공동체의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로 정의된다(UN Statistical Commission, 1994).

가. 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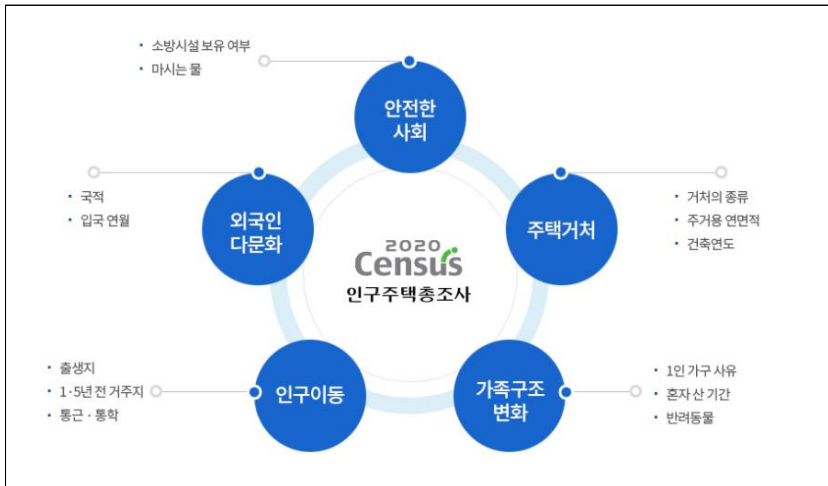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는 인구센서스, 즉 인구주택총조사가 대표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의 모든 인구 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UN(United Nation)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다³⁾. 센서스의 조사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첫째, 자료수집이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항목으로 센서스조사표에 특정 문항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항목인 핵심조사항목이 있다. 둘째, 자료수집이 국제적으로 권장되지만, 핵심조사항목을 토대로 도출될 수 있는 항목인 핵심파생항목(예: 총 인구 수)이 있다. 셋째, 많은 나라에서 센서스문항으로 포함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사항목으로, 센서스항목으로 추가하여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인 추가조사항목이 있다. 넷째, 센서스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자료수집이 권장되고 있는 항목으로, 핵심조사항목이나 추가조사항목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항목(예: 지난 1년 간 출생아 수)인 추가파생항목이 있다. 또한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인 등록센서스가 있는데, 이 방식은 2015년에 도입되어 인구, 가구, 주택의 총 규모, 구조 등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항목이 수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저출산, 고용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필수적인 조사항목으로 교육과 출산

3) 인구주택조사홈페이지(<https://www.census.go.kr>)에서 2021.12.17. 인출)

26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력, 산업,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조사 항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s://www.census.go.kr/cds/cdsSurvItnView.do?q_menu=1&q_sub=2)에서 2021. 12. 17. 인출.

<표 2-1>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조사 항목	UN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성명		●	●
성별	●	●	●
나이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인구 가구 및 가족상태 (결혼한 배우자, 동거파트너, 편모, 편부 등)	●		
국적	●		
입국 연월	●	●	●
국적취득 연도	●	●	●
민족문화적 특성	●		●

조사 항목	UN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언어	●		
인종	●		
토착민	●		
종교	●	●	
문해력	●		
교육 정도	●	●	●
교육 영역	●	●	●
교육훈련 및 교육자격 분야	●		
출생지	●	●	●
1년 전 거주지	●	●	□
5년 전 거주지(과거 특정 날짜 거주지)	●	●	□
이전 거주지	●		
아동 보육		●	●
활동 제약		●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	●	●
활동제약 돌봄			●
통근 통학 여부		●	●
통근 통학 장소		●	●
이용 교통수단		●	●
통근 통학 소요시간		●	●
경제활동 상태	●	●	●
종사상 지위	●	●	●
산업	●	●	●
직업	●	●	●
현 직업 근무연수	●	●	●
근로 장소	●	●	●
근로 시간	●		
소득	●		
혼인 상태	●	●	●
혼인 연월	●	●	●
출산 자녀 수	●	●	●
자녀 출산 시기	사망 자녀 수	●	●
	첫째자녀	●	●
	마지막 자녀	●	●
12개월 동안 출생아	●		
12개월 동안 어린이 사망아	●		
12개월간 가정 내 사망	●		

28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조사 항목	UN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고아 여부	●		
추가 계획 자녀 수		●	●
결혼 전 취업 여부		●	●
경력 단절		●	●
사회 활동		●	●
생활비 원천		●	●
본관		●	
자가계정 농업생산물	●		
작년 농업 일자리 특징	●		
가구 구분	●	●	●
거주 기간	●	●	●
주택용 소방시설			●
마시는 물	●		●
건물 및 거주층		●	●
사용 방 수	●	●	●
주거시설 형태	●	●	□
하수시설	●		
폐기물 처리	●		
요리에 사용하는 연료	●		
조명, 전기 유형	●		
배관 가스설비	●		
난방시설	●	●	●
1인 가구 사유			●
혼자 산 기간			●
반려동물			●
주차장소		●	●
주거 전용 영업 겸용 여부	●	●	●
하나이상의 가구에 의한 점유	●		
점유자	●		
점유형태	●	●	●
점유유형(공공, 민간, 공동, 협조적)	●		
입차료	●	●	●
타지 주택 소유 여부		●	
보유기간	●		
주인(대표) 가구 여부		●	
정보통신장치 가용성	●		
사용 자동차 수	●		

가구

조사 항목	UN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내구성 가전제품 사용	●		
옥외공간	●	●	□
거처의 종류	●	□	□
주거용 연면적		□	□
대지면적		●	□
총방 수	●	□	□
건축연도		●	□
주거시설 수	●		
주택	건물 내 거주인	●	
	건물 내 거주 위치	●	
	주거에 대한 접근성	●	
	외벽의 건축 자재	●	
	바닥과 지붕의 건축자재	●	
	엘리베이터 사용	●	
	농장(부속) 건물	●	
	수리상태	●	

주: UN 센서스 권고사항, 2015년 및 2020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 행정자료 대체항목.
자료: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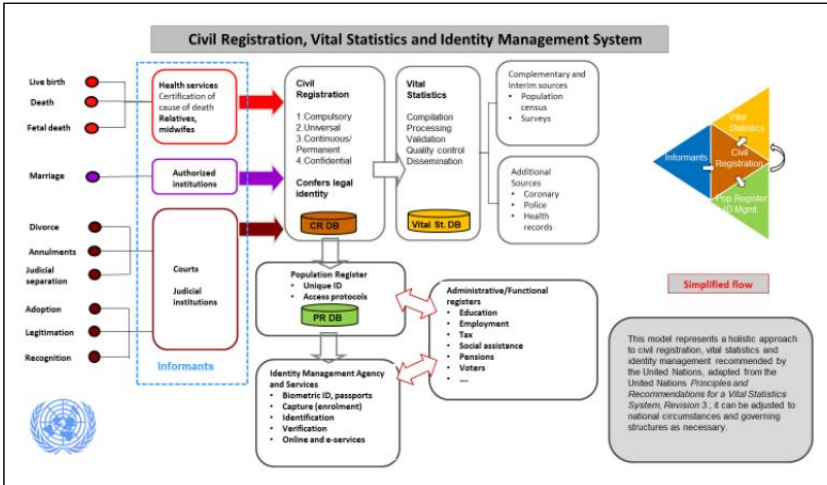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로 활용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는데, 인구 분야에 있어서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에 활용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구조 및 추계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노령화 지수를 작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동향조사를 수행한다. 월별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구의 자연증가 등 같은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기별로 합계출산율, 일반혼인율, 일반이혼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 같은 지표를 발표한다. 월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같은 통계는 시

청 및 구청, 읍·면·동에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월별 인구동향에는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건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생 및 사망 통계는 출생과 관련해서는 성별 출생아 수, 조(粗)출생률 및 출생성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출산 순위별·시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등을 발표한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성별·연령별·사망장소별·시도별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사망장소별 비중, 월 사망자 수 비중 등을 발표하고 있다. 혼인·이혼 통계는 혼인 건수 및 조(粗)혼인율, 종류(초·재혼)별 혼인, 혼인연령, 성·연령별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 시도별 혼인, 월별 혼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혼 통계는 이혼 건수 및 조(粗)이혼율, 이혼연령, 성·연령별 이혼,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 종류(협의·재판)별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시도별 이혼, 월별 이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구 현상을 파악하는 인구동태 시스템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의 인구동태통계는 민사등록 시스템과 인구동태 통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민사등록 시스템(civil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는데, 민사등록은 일차적으로 법률문서로서 실시된다. 민사등록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개인의 민사 정보(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를 등록한다. 인구동태 통계 시스템(vital statistics system)은 민사등록 시스템에 기록된 동태사건 자료를 처리해서 제표작업을 실시하여, (정상)출생(live birth), 사망(death), 영아 및 태아사망(infant and fetal death), 혼인(marriage), 이혼(divorce) 등의 통계를 기록한다. 민사등록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는 인구동태 통계 시스템으로 이첩된다. 민사등록 시스템은 계속해서 인구등록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는 총인구(total population)와 성별 또는 연령별 인구구조(population by sex and age)를 파악하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같은 인구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통계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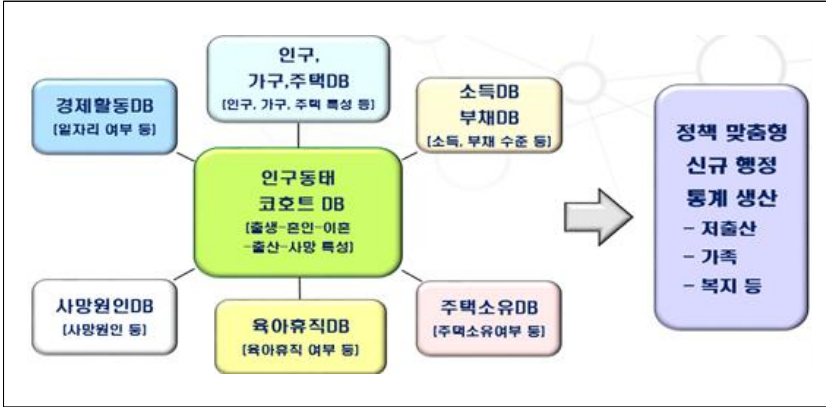
[그림 2-2] 유엔 인구동태통계체계



자료: UN (2019).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identity management systems: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p.23.

한편, 통계청은 2020년 12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하였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4종의 개별통계 DB를 출생 기준으로 연계한 자료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6년간의 자료를 구축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연도별 인구를 패널로 연계한 자료로 동일 연령대 사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혼인, 출산, 이혼, 사망을 경험하는 패턴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패널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통해 향후에는 코호트 합계 출산율·기대수명 작성 및 인구 특성별(성, 연령, 혼인 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 차별 출산력과 사망력 연구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통계청, 2020B).

[그림 2-3] 인구동태 코호트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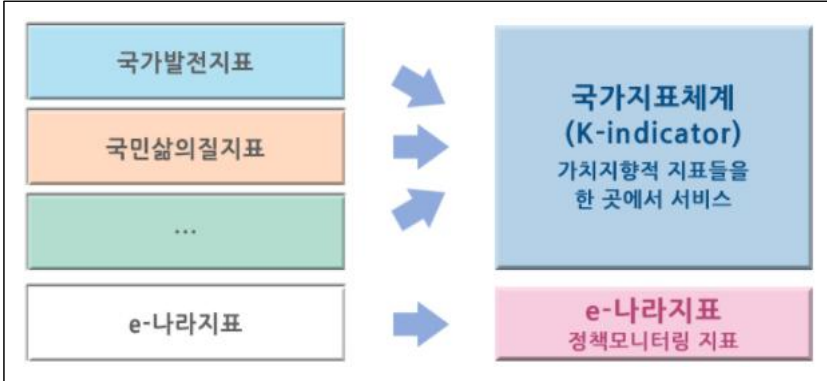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B).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구축(보도자료).

나. 인구 지표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핵심적인 인구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표는 가치지향적 지표인 국가지표체계(K-indicator)와 각 부처가 제공하는 정책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지표체계(K-indicator)의 국가발전지표는 인구 외에도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가족, 건강, 교육, 여가, 주거와 교통,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분야의 지표는 2개의 주요 지표와 5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국가지표체계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소개(<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에서 2021. 4. 30. 인출).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영역의 지표는 총 25개로 인구 변화와 관련된 22개 지표와 인구구조와 관련된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인구 분야 국가발전 지표

분류	지표	출처	
인구 변화	주요 지표	부양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조 지표	고령화지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구조	주요 지표	인구성장률	통계청, 「인구총조사」
		조사망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조 지표	체류 외국인 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총인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sCd=7&dataLvCd=7_6&pagenum=1, 에서 2021. 4. 30. 인출).

〈표 2-3〉 E-나라지표 인구영역 지표

분류	지표	담당 부처
인구 변화	결혼이민자 현황	법무부
	국내인구 이동	통계청
	국적통계 추이	법무부
	국제인구 이동	통계청
	농가 및 농가 인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통계청
	수도권과 지방 현황	국토교통부
	이동 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여가 및 여가인구	해양수산부
	영아 사망	보건복지부
	모성 사망	보건복지부
	외국국적동포 현황	법무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통계청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여성가족부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
	총출입자 현황	법무부
	총인구	통계청
	인구성장률	통계청
	출생 사망 추이	통계청
합계출산율	보건복지부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외교부	
인구구조	남녀별 인구구조	통계청
	연령별 인구구조	통계청
	노년부양비	보건복지부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2021. 4. 30. 인출).

통계청 웹사이트(KOSIS)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대 지표 중 인구 지표는 총 27개로 추계인구, 총인구수(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주민등록인구,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독거노인 비율, 인구성장률, 중위연령, 가구 수, 1인가구 수, 다문화가구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출생성비, 사망률, 사망자 수,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외국인등록인구, 국내인구 이동자 수, 내국인 국제 순이동, 외국인 국제 순이동, 국제 결혼 건수, 종교인구, 인구 밀도, 학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되고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제3차 지속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는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77개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의 지속발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사회 분야 지표 중 인구 영역은 인구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 규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3개의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표 2-4〉 사회 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영역	항목	지표
1. 형평성	1-1. 빈곤	01) 빈곤인구 비율(%)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 실업률(%)
	1-2. 노동	04) 근로시간(시간/월)
		0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1-3. 남녀평등	06)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0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2-1. 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09) 영아 사망률(명/출생아 천 명)
	2-3. 수명	10) 기대여명(세)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2)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2-5. 건강관리	13) 국가보건의료 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3. 교육	3-1. 교육수준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17) 공공육비 지출(%)
		18) 최소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
4. 주택	4-1. 생활환경	19) 주택 수(인구 1,000명당)(호/1,000명)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영역	항목	지표
5. 재해·안전	5-1. 범죄, 재해	21) 범죄발생률(건/10만 명)
		22) 자연재해 피해(명/억 원)
6. 인구	6-1. 인구 변화	23) 인구 증가율(%)
		24) 인구 밀도(명/km ²)
		25) 고령인구 비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23.

제2절 인구정책과 인구조사 데이터

인구정책에서 사용된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인구정책에서 사용한 조사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정책이란 인구가 국가와 사회에 유리하도록 변화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인구정책은 인구 변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한다(박종서 외, 2016). 인구조정정책은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데, 가족계획사업, 이민사업, 인구자질 향상과 같이 인구의 총량이나 인구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인구조정정책이 인구 변동의 원인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면, 인구대응정책은 인구 변동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응(혹은 적응)할까에 초점을 둔다. 인구 변동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교육, 사회복지 정책 등을 포괄하여 인구대응정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광의의 인구정책은 출산, 사망, 이동 같은 인구 변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모든 현상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인구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박종서 외, 2016; 김종훈 외, 2018). 이에 본 절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인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정책의 범주가 단순히 인구 변동만을 포함하기보다는 보건, 복지, 노동, 경제, 조세 등 다양한 영역들이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이 모든 영역들을 포괄한다. 기본계획의 세부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인 인구 변동 현상과 그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현황으로 사용된 조사데이터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총 3부로, 제1부에서는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제2부에서는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제3부에서는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결과를 제1부와 제2부에서 제시하였다. 제1부에서는 인구 변동과 저출산 원인 진단, 인구 변화, 정책평가 등으로 구성되고, 제2부는 세부정책과제별 현황을 보기 위한 조사데이터로 구성되어 챗터별로 데이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제1부와 제2부를 구분하여 인구조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제1부는 기본계획에서 현황으로 기술된 조사데이터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제2부에서는 정책과제별로 조사데이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에서 활용된 인구조사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데이터(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인구조사 데이터가 인구정책의 현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 현재 사용되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과 겹치지 않으면서 함께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제1부인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에서 사용된 인구조사 데이터는 제시된 조사의 내용에 따라 인구 부문과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인구 부문인 인구구조 및 인구 변동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총 19개이다. 그중 인구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7개, 인구 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12개이다. 인구 규모는 이삼식 외(2019)의 연구에서 도출된 추계 결과인 인구 규모의 변화와 출산율 기준별 총인구 전망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는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부양비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 변동은 출생과 관련한 내용이 9개로 주를 이루었고, 합계출산율과 평균 출생아 수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2개로 수도권 이동을 살펴보고, ‘사망’은 1개의 주제를 조사했다.

〈표 2-5〉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인구 부문)

구분	조사 내용	자료 출처	
인구 구조 (7)	규모 (2)	인구 규모 변화(총인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 대응전략(이삼식 외, 19)
		총인구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 대응전략(이삼식 외, 19)
	구조 (5)	인구피라미드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대응전략(국회예산정책처, 20)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장래인구추계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	장래인구추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추이	장래인구추계
		부양비 변화 (1960~2100)	장래인구추계

구분	조사 내용	자료 출처	
인구 변동 (12)	출생 (9)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OECD 국가 간 합계출산율	OECD Family Database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 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주출산 연령대의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비혼 출산율	인구동향조사
		15~4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평균 출생아 수	인구주택총조사
		기혼 여성 중 연령별 무자녀 비율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이상립 외, 19)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2006~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 계획(예산안 기준)
	사망 (1)	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이동 (2)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장래인구추계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	생활시간조사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 부문은 가구유형, 가치관, 고용, 교육, 보육 및 돌봄, 의료, 일·가정 양립, 주택, 지역균형, 혼인의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일·가정 양립’으로 10개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 근로시간 등을 다루거나 일·가정 양립제도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의 출처로는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그다음이 생활시간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조사항목은 ‘가치관’ 항목으로 총 7개의 조사 내용을 제시하였다. 혼인과 관련된 문항인 ‘결혼의향’,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 결혼의향이나 ‘다양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내용, ‘혼인신고’, ‘동거’에 관한 가치관 인식을 물어보는 내용이다.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의 데이터 출처는 주로 개별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다른 조사 결과를 활용

하고 있어, ‘가치관’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다룰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용’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총 6가지를 살펴보고, 여성의 일자리 질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을 조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조사 내용의 데이터의 출처는 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돌봄’은 보육 양육비 부담 또는 양육 공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고, 데이터의 출처는 각기 다른 보고서에서 다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총 3가지로 혼인율 또는 초혼 연령을 다루고 있고 데이터의 출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였다. ‘교육’은 성별 대학 진학률,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통계연보와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택’ 항목은 주택수요, 아파트 값과 출산율을 보고 있어 인구조사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주택과 출산율과의 관계성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지역균형’은 지역별 종사자 수와 성장률을 살펴보고 지역이 얼마나 균형 있게 유지될 것인가를 다루었고, 사업체조사와 개별보고서의 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구유형의 변화(‘가구유형’)와 연령별로 진료비 추계에 대한 내용(‘의료’)이 제시되어 있다.

〈표 2-6〉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사회 부문)

구분	조사 내용	자료 출처
가구 유형 (1)	가구유형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가치관 (7)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황	사회조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형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변수정 외, 17)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박복순, 19)

구분	조사 내용	자료 출처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출산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김은지 외, 19)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통계청
	결혼 의향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문정희 외, 19)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문정희 외, 19)
	삶의 만족도 출산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 Kim, J. 18)
고용 (6)	성별 연령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국가 성별 임금격차	OECD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 계층별 장래 취업자 구성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 (2)	성별 대학 진학률	교육통계연보
	공립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	인구 변화가 노동시장·교육·의료에 미치는 영향(이철희, 19)
보육 및 돌봄 (4)	보육료 지원 늘려도 체감도 상승폭 미미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
	OECD 주요국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
	양육비 부담 정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17)
	워킹맘 퇴사 고민 시점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KB경영연구소, 19)
의료 (1)	연령 계층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구성비)	2018 건강보험 주요 통계
일·가정 양립 (10)	성별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맞벌이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생활시간조사
	맞벌이 가구 비율	통계청

42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구분	조사 내용	자료 출처
	근로시간	생활시간조사
	육아휴직 이용자 수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KBS 설문결과, 18
	아빠 전속 육아휴직 기관과 소득대체율	OECD family database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성별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주택 (2)	신규 주택수요 추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수도권 아파트값과 출산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발제자료
지역 균형 (2)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
	성장률 격차 전망	1인당 GRDP 장기 추세 성장률 전망(산업연구원, 19)
혼인 (3)	성별 학력별 혼인율 격차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여성 혼인율	인구동향조사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인구동향조사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분야별 정책과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에서 인구조사 데이터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주요하게 여기는 출산과 돌봄, 다양한 가족으로 한정하여 세부정책을 보았다.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인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은 총 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항목에서는 좋은 직장의 조건 같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같은 일·가정 양립 휴직제도의 사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성별 격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에서는 여성의 자녀출생 후 경력단절과 종사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출산 기피현상 현황을 설명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과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 중심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아동발달에 대한 통계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이런 관점과 내용을 포괄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항목에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아동학대, 양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1-5. 생애전반 성 재생산권 보장’에서는 자녀의 필요성, 성과 관련된 피임, 성경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생산권과 관련된 기초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출처는 개별보고서(OECD,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거나, 행정자료(고용보험, 건강보험공단, 보육통계), 또는 관련 통계자료(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정책과제에서 사용된 통계의 자료 출처는 절반 이상이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구목적에 따른 일회성 통계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계

44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획에 선정된 주요 정책과제들은 정기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표 2-7〉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

항목	조사 내용	자료 출처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좋은 직장의 조건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설문조사(잡코리아, 20)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 사용 성비	고용보험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임금격차	OECD, 18
	유리천장지수	이코노미스트, 20
1-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비경제활동 실업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상용근로자 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사교육 참여율	교육부-통계청, 19
	공보육 이용률	보육통계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17
	유아교육 월평균 학부모 부담액	유아교육 월평균 학부모 부담액, 17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18
	아동학대 관련 통계	아동학대연차보고서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	보육실태조사
1-5. 생애전반 성 재생산권 보장	자녀의 필요성	사회조사
	비혼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첫 성경험 연령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성조숙증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피임방법	국민건강증진계획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청와대 국민청원 젠더이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는 총 5개의 세부과제 중 3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과 자료출처를 확인하였다. ‘3-1. 미래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은 고용, 주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주로 사용하였다.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에서는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고용이 연결되지 않는 현황과 경력단절 사유, 지위변화 등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로는 3-1과 3-3은 국가통계포털, 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승인 통계의 결과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3-3과제의 청년기의 주거와 관련된 내용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나 인구조사 데이터의 종단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주거와 관련된 고용, 결혼, 출산 등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는 학력별 고용률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고용변화는 답을 수 없으며, 더불어 일자리 질에 대한 내용도 한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2-8〉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 사용한 조사데이터

항목	조사 내용	자료출처
3-1. 미래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학령인구의 감소	국가통계포털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조사 결과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고용률/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의 청년가구 비율	2018 주거실태조사
	청년 가구 월세 거주율	2018 주거실태조사

46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항목	조사 내용	자료출처
	청년입차가구 대 일반 가구의 비율	2018 주거실태조사
	자산 중 부채 비중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종 졸업 후 취업평균 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세 낮아지면 첫 아이 출산 확률은 1.9% 상승	국회예산정책처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경력단절 사유	통계청
	고학력 여성 고용률	-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과 종사상 지위 변화	여성가족부, 19
	성별 대학 진학률	교육통계연보
	노동시장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경우 국민 총생산 증가	골드만삭스, 19
	학력별 여성고용률(25~34세)	Education at glance 2019, OECD
	전문대졸 이상 여성고용률	Education at glance 2019, OECD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일자리 대변화 예측	세계경제포럼, 16

주: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는 제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에서는 5개의 과제 중 2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았다.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미 변화와 실제로 가구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비혼출산과 자녀 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4-4. 지역상생기반 구축’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유출입이나, 귀촌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

하였다. 자료 출처를 살펴보면,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은 국책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실제 가구변화는 통계청의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조사(보고서)는 연령별에 따른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횡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인구조사 데이터를 종단으로 구축한다면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4-4는 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 인구동향조사의 이동통계를 이용하여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인구조사 데이터를 승인 통계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여 구축한다면, 인구조사 데이터가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른 승인 통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9〉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사용된 조사데이터

항목	조사 내용	자료 출처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가족에 대한 의미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가부, 20)
	가구구성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의 삶의 질 종합지수(가족공동체)	통계청, 18
	청년세대 여성의 결혼 기피 사유	인구보건복지협회, 19
	비혼출산율/합계출산율	OECD, 2018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자녀의 성과 분에 대한 결정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가부, 20)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
	전입 사유별 수도권 순이동	-
	귀촌인 규모	-
	수도권 인구유출입	-

주: ‘연령통합적 사회준비’,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은 제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절 인구패널

1. 인구패널의 등장 배경

학술적으로 인구패널이라는 용어 자체는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인구는 조사 대상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패널조사 역시 아동패널, 청소년패널, 여성(가족)패널과 같이 패널의 대상이 되는 인구 세부 집단의 이름을 가진 패널조사로 존재한다. 인구패널이라는 용어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공식 등장하였다. 이 인구패널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배경하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논의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인구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현재)이다. 이 중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그 방향성이 서로 정반대이다. 인구자질향상정책은 산아제한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당시 낮은 수준에 도달한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연속선에 있었다.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까지 약 45년 동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료는 주로 출산억제정책을 추진 및 평가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 성과, 인센티브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여 생성되었다.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0년대 이후에는 가족형태 변화, 가족복지 등으로 자료수집의 관심과 분야가 전환되었다.

2002년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연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은 2001년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현상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하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부터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시도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되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이래 인구 대체 수준(합계출산율 2.1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그 영향으로 출산과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는 관심과 투자가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긴급하게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이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가족과 출산력 조사(Family and Fertility Survey)를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의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저출산에 대책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전국 가구조사의 형태로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예산 소요가 커서 매년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조사이고 긴급히 실시된 임시적인 특별조사

(ad hoc survey) 형식을 취하고 있어 종단적(longitudinal) 또는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횡단조사로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가임기에 진입한 이후부터 연령 진행에 따라 변화한 내용을 회고적으로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개인별로 결혼력(marriage history), 출산력(fertility history), 교육력(educational history), 노동력(labor history), 직업력(vocational history) 등을 파악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만혼 및 저출산과 다른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으로 회고적 질문이 갖는 기억의존성으로 인한 오차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임이 분명하다. 먼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조사했다는 것 외에도 일부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종단적인 접근을 적용했고, 이후 동일 대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단적인 접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산행위는 거시적(macro-level)인 사회·경제현상이 개인의 미시적(micro-level)인 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변화된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making-decision)을 실천(practice)한 결과이다. 사회·경제현상-생활행태-의사결정-실행 간에는 명백한 인과관계(causality)가 존재하고, 그러한 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들이 사회·경제현상-생활행태-의사결정-실천의 메커니즘(mechanism)에서 매개적인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횡단적인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로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인구패널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 및 검토가 시작되었다.

2. 인구패널조사의 개념 및 특성

변화하는 인구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로 '인구패널'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구패널이라는 용어는 인구학 분야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 사회학, 행정학, 가족학, 경제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기존의 패널조사 데이터를 연구에 많이 활용하는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구패널조사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구패널은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구패널은 실제 인구 현상에 대한 패널조사연구(panel survey research)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대상 집단이다. 그 집단은 개인, 가구·가족, 때로는 기업,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 인구패널조사는 인구패널을 구축하여, 출산력, 가족, 세대, 젠더 등을 포괄하는 인구 현상에 대한 동일 변수를 다른 시점에 걸쳐서 반복해서 관찰(측정)하는 패널조사(panel survey) 또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핵심은 특정 개인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이다. 반복적으 측정하면 개인들의 관측하기 어려운(unobservable) 속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구행위와 다른 사회경제적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즉, 인구패널조사는 개인 내(within-individual) 변화 또는 차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구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패널조사는 동일 개체(unit)에 대해서 반복측정하기도 하지만, 추세연구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패널의 개체 소모(attrition: 사망, 이동 등의 불가피한 이유, 또는 조사의 계속 참여에 대한 거부 반응)가 있을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시점마다 다시 표집을 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패널조사는 코호트연구, 코호트추적조사(cohort follow-up survey)와는 다르다. 코호트추적조사는 출생, 또는 혼인 등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을 계속 추적하는 것으로, 코호트의 개체 소모에 대해서 자연적 소모의 경우에는 다시 표집을 하지는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즉, 패널 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동일한 샘플을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패널을 구축한다 함은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되, 인구 현상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변수들은 특히 성과 연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인구 현상을 적어도 성과 연령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여야 인구패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현상을 분석하는 인구패널조사는 인구학적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인구학적 행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결혼과 동거 등 파트너십의 형성과 해체, 질병의 발병과 심화 등과 같이 개인의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구의 구조 및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예컨대 인적자본, 건강 등)의 변화를 동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결과들에만 한정한다면 그 학술적, 정책적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력이나 소득 등 같은 사회경제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세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인구학적 현상은 개인 수준의 요인들을 넘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인구학적 결과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패널 데이터는 복수의 세대를 동시에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구패널이 되려면 다양한 인구학적 이론들을 검정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을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하여 베커의 이론을 비롯하여 최근의 저출산의

덧 이론, 템포와 콰텀 같은 다양한 출산 이론을 검정해 볼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요약하면, 인구패널조사는 한 사회의 인구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종단조사이다. 좁은 의미로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학적 요인과 가족형성은 물론 진학과 입직 등 생애사적 사건들의 현황과 인과관계, 그리고 이의 구조적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이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인구학 요인과 생애사적 사건들 외에 이와 연관된 가치관 변화, 가족구조, 사회관계, 건강과 보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인구학적 패널조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패널자료들은 어느 정도 인구패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다수의 패널자료는 개인의 결혼, 출산, 지리적인 이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패널의 성격에 따라 건강의 변화(한국 고령화패널, 의료패널), 인적자본 발달(아동패널), 인적자본 축적 및 노동시장지위 변화(한국노동패널, 대졸자 패널 등) 등에 관한 변수도 제공하고 있다. 인구패널은 다른 명칭을 갖는 패널자료와 비교할 때 전통적인 인구 현상(결혼, 출산, 인구 이동, 사망 등)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 데이터로서, 기존의 패널자료와 횡단면 데이터의 성격을 갖는 인구 관련 자료들(인구센서스, 인구동향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등)을 개선·보완하여, 인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인구패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구 변동의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 사회의 여건이나 가용한 다른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혹은 유용한 내용만을 포함한 자료도 좋은 인구패널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인구패널의 필요성

전문가조사에 의견을 공유한 전문가들은 모두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인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구패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인구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특정 현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패널조사데이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구패널이 구축되어야 인구 관련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출산 행동, 가족과 거주실태,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 젠더 의식과 역할 등의 사회심리적, 개인의 웰빙 또는 재정상태, 건강상태 등 변수 및 항목을 개발하여, 동일변수를 시점별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에서 자주 활용하는 통계청 자료 등은 주로 집단 수준(aggregate)에 머물러 미시적 수준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출생·사망 통계에는 순수인구학(남녀, 연령, 혼인 상태) 변수 및 항목을 넘어서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결혼·출산 및 이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거주지, 일자리, 건강 행위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출산의 요인에 관한 인과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경제적, 정책적 요인들이 인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을 두고 개인의 행위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서는 이를 고려한 동태적, 장기적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는 반복 횡단 자료인데, 이러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해도 적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하다. 특히 회고적인 문

항(예컨대 결혼 전 거주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패널 데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가구에 관한 모든 변수에 대해 회고적인 문항을 포함할 수 없고, 무엇보다 회고적 정보가 갖는 한계(예: recall error)를 고려할 때 패널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 인구패널자료가 구축된다면 인구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패널자료는 개인 고정효과모형(individual fixed effect model) 같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고 특정한 요인이 인구행위에 미친 인과적인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비교적 긴 패널이 구축되면, 개인들의 생애주기적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구패널을 구축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중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인구의 대변동에 대하여 패널조사를 시행하여 정책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샘플을 장기간 동안 추적조사하는 패널 데이터의 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인구학적 현상을 주목적으로 설계한 패널 데이터는 극히 드물다. 한국노동패널이나 한국복지패널 등의 기존 데이터가 결혼과 출산 등 인구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인구 현상에 대한 연구에 특화된 패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사례수가 적어서 인구특성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일부 인구학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주로 노동시장 참여에 패널 데이터를 집중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여러 인구학적 현상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면적인 추론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다른 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인구학적 행위 및 태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인구에 관련된 변수를 충분

히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출산이력(Fertility History)를 구축하는 것에도 불완전하다. 또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연구한다고 할 때, 횡단 자료를 분석하면 고용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지, 출산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패널자료를 활용하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고용이 출산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엄격하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구 변동 관련 논의는 자료의 부족이나 이론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연령, 시기, 세대효과를 제대로 분리하여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인구패널을 구축하면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다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고, 다양한 출생 코호트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연령, 시기, 세대효과에 관해 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현상은 서양 사회구조사(프랑스 아날 학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말하는 장기지속(long-duration)의 현상이 아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주식이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에 못지않게, 인구 지표도 상승과 추락을 되풀이하여, 지속성이 단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인 추세분석이나 일부 코호트 추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구패널의 구축이고, 이를 통해서 인구패널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나 정책 입안을 위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구패널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 현상과 연관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학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각 이론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을 수집한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인구패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

하여 인구 변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학적 연구에 기반한 사회정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인구학적 현상에 특화된 데이터가 없어 정밀하고 세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과거 선진국의 경험을 쫓아가던 것과 달리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 현상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명확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 변동을 이해하고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인구 분야의 패널조사 필요성이 사회적·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4. 인구패널의 구축 과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패널은 저출산이라는 인구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1차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간 인구패널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패널조사는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1998년 노동패널조사 등으로 매우 드물었다. 패널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패널조사가 빠르게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인구패널조사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2006년까지 이미 본 조사를 시작했거나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 및 예비조사를 실시했던 패널조사는 거의 20종에 이르렀다. 이들 패널조사의 주제는 교육, 노동, 고용, 기업, 사업체, 인적자본, 복지, 의료, 소득보장, 재정 등 다양했으며, 패널대상도 아동, 청소년, 청년, 대졸자, 장애인, 여성, 노인, 가족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인구를 주제로 한 패널조사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표 2-10〉 2006년까지 도입되었거나 사전 준비 중인 국내 패널조사 유형

패널조사명	실시기관	시작연도
한국가구패널조사	대우경제연구소	1993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2006
한국복지패널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7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2008
여성인력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재정패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출처: 한국가구패널조사(<https://homepanel.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노동패널(<https://www.kli.re.kr/klips/>에서 2021. 11. 30. 인출).
 고령화연구패널조사(<http://survey.keis.or.kr/klosa/klosa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사업체패널조사(<https://www.kli.re.kr/wps/index.do>에서 2021. 11. 30. 인출).
 장애인고용패널조사(<https://edi.kead.or.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교육종단연구(<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에서 2021. 11. 30. 인출).
 청년패널조사(<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http://survey.keis.or.kr/goms/goms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http://www.krivet.re.kr/ku/ha/kuCAADs>에서 2021. 11. 30. 인출).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ttp://www.krivet.re.kr/ku/ha/kuCCADs>에서 2021. 11. 30. 인출).
 청소년패널조사(<http://archive.nyp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http://www.kreis.or.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복지패널조사연구(<https://www.koweps.re.kr:442/probe/result.do>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의료패널(<https://www.khp.re.kr:444>에서 2021. 11. 30. 인출).
 여성가족 패널조사(<http://klowf.kwd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에서 2021. 11. 30. 인출).
 여성인력 패널조사/여성관리자 패널조사(<http://kwmp.kwd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재정패널(<http://panel.kipf.re.kr>에서 2021. 11. 30. 인출).

이에 따라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면서 인구패널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200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인구패널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고,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패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장영식 등, 2008). 인구패널 예비조사는 15~49세 기혼 여성이 속한 1510 가구를 표집하여 15~59세 기혼 남녀(2,731명), 19~40세 미혼 남녀(521명), 13~19세 청소년(613명), 60세 이상 노인 가구원(22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내용으로 가구형성 및 가구 경제,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양성평등 가치관, 정책 인지도, 가족생활 및 가족 관계, 취업력, 소득 및 지출, 건강 및 여가, 일·가정 양립, 피임, 임신, 불임실태, 향후 출산, 혼인력, 보육 및 양육, 모자보건, 생활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장영식 등, 2008)에서는 인구패널 예비조사를 토대로 인구패널의 추진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패널 명칭의 명확화, 조사 대상의 축소, 표본규모의 적정화, 패널 분석 방법론의 개발, 인구패널조사 항목의 개발, 조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조사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당시 정부는 인구패널 도입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후 인구패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인구조사 데이터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 3 장 인구조사 데이터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본 절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인구패널과 유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출산력조사)에 대해 살펴보고, 결혼과 자녀 출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 개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출산력조사)’는 19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인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1964년 ‘전국 가족 계획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1년 현재 24번째 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출산력조사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가족생활 등에 대한 실태 파악,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 도출,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인구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한국 지표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출산력조사에는 ‘한

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또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를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다(이소영 외, 2018, p.16).

출산력조사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조사의 명칭, 조사의 대상, 조사의 내용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1964년 시작된 출산력조사는 1979년부터는 매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1985년부터는 명칭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로 개편되었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로 개편되었다. 조사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중점 조사 대상이었다(김승권 외, 2009).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 규명과 그 대책 강구 및 원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복지 측면을 강화하였다(김승권 외, 2009).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시된 2005년, 2009년,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경우 2012년 조사부터 통계청의 유사조사 통합 권고에 따라 출산력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표 3-1〉 출산력조사의 이력

년도	조사 명칭	보고서명
1964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1964
1965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5
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6
1967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68
1968	전국출산력조사	국립가족계획연구소, 「한국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70
1971	전국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출산력과 가족계획, 1971년 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보고」, 1972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가족계획 및 출산력」, 1974
1974	한국출산력조사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 「한국출산력조사:1차보고서」, 1977
1976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1978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1982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1982
198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198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9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2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
200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4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201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

자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출산력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결혼력, 임신력, 출산력, 모성보호, 자녀양육·교육 체계 및 비용, 일·가정 양립 실태, 결혼·자녀 가치관 등과 결혼력, 임신력, 출산력 등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책과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인구정책, 모자보건정책, 가족정책 등에 대한 국민 욕구이다. 2015년 및 2018년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 욕구(필요), 경험, 도움 정도(만족도), 향후 이용의향 등 인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및 표본

현재의 조사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1982년 수행된 전국 가족보건 실태 조사부터 최근까지의 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대체로 15~49세 기혼 여성이 대상이었으나, 조사에 따라 대상 가구 수와 조사 대상 개인의 성별, 연령 및 사례 수 등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2~1988년에는 가구를 조사하고 기혼 여성만을 조사했다. 1988년 조사에서는 기혼 여성의 연령이 15~44세로 차이를 보였다. 2003~2012년에는 기혼 남녀가 조사 대상이었고, 최근 이루어진 두 조사(2015년 및 2018년 조사)에서는 표본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15~49세 기혼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경우 2015년 조사부터 출산력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여 20~44세 미혼 남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표 3-2〉 출산력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대상 가구 수	기혼 남녀	기혼 여성	기타
1982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7,375가구		15~49세 (5,37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7,415가구		15~49세 (8,421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864가구		15~44세 (7,792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540가구		15~49세 (7,384명)	18~34세 미혼 남녀(3,715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0,613가구		15~49세 (6,060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216가구		15~49세 (6,450명)	65세 이상 노인 (2,207명)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388가구		15~64세 (8,935명)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5,758가구	15~59세 (11,111명)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497가구	15~59세 (10,132명)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3,883가구	15~64세 (9,961명)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970가구	15~64세 (10,071명)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009가구		15~49세 (11,009명)	20~44세 미혼 남녀(2383명)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207가구		15~49세 (11,009명)	20~44세 미혼 남녀(2462명)

자료: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다. 조사 내용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는 최근에 수행된 2018년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을 조사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과 2018년 출산력조사의 주요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기혼 여성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 관련된 많은 문항과 관련 정책이 주 내용이다. 가구와 상주 및 비동거 가구원과 관련된 사항, 가구 일반특성, 결혼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산전 및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출산력조사의 문항은 비교적 많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조사 문항은 주로 결혼과 출산,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3〉 2018년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기혼 여성)

영역	내용
가구사항	가구 전반에 관한 사항 가구원에 관한 사항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등) 비동거 가족에 관한 사항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비동거 시기, ·이유·지역 등)
가구 일반특성	주거, 주택 관련 소득, 지출, 부채, 자산
결혼에 관한 사항	결혼 전 거주지 결혼에 관한 태도 및 가치관 결혼 관련 사항(동거, 혼인신고, 결혼식) 결혼 이력 결혼 비용, 당시 주거형태, 대출 결혼 정책(필요성,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중요도)
임신, 출산, 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력(임신 횟수, 시기, 방법, 종결시기, 임신결과 등) 총 임신 횟수 총 출산 자녀 수, 사망 자녀 수 자녀 성별 선호, 자녀 계획 자녀 출산 태도(자녀 필요성, 이상 자녀 수 등) 피임 관련 사항(피임 경험, 목적, 방법 등) 난임(경험, 검사, 치료 과정 및 결과)
산전,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산전 관리(산전 진찰 장소, 초진 시기, 횟수) 분만(분만 장소, 방법) 임신출산비용지원 제도(국민행복카드)의 인지도, 경험, 도움 정도, 중요도 산후 관리(경험, 산후우울, 산후조리) 모유수유, 수유형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부부 간 육아, 가사 분담과 관련 태도 취학 전 자녀의 돌봄(이용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비용) 초등학교 재학 자녀 돌봄(이용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비용)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기간 양육을 위한 비용 보육 정책 관련 인지, 중요도, 경험, 도움 정도, 중요도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부인과 남편의 취업 현황 부인의 직업활동, 가치관 결혼 전후 근로 상황 임신, 출산 전후 근로상황 일·가정 양립 정책, 제도 인지, 중요도, 경험, 도움 정도, 중요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저출산 및 국가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대한 의견

자료: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3-4〉 2018년 출산력조사의 조사 내용(미혼 남녀)

영역	내용
가구사항	가구 전반에 관한 사항 가구원에 관한 사항(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등) 비동거 가족(부모)에 관한 사항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비동거 시기, ·이유·지역 등)
가구의 일반특성	주거, 주택, 비동거 경험 소득, 지출, 부채, 자산
교육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취업 기간 취업활동(현재의 경제활동) 취업활동(마지막 경제활동) 취업활동(최초의 경제활동) 직업 관련 가치관, 태도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사항	현재의 이성교제 결혼 가치관 및 결혼 관련 인식 결혼 하지 않은 이유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	자녀 및 가족 가치관, 태도, 인식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저출산에 관한 인식 결혼·출산·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필요성, 인지도 및 중요도

자료: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라. 시사점

출산력조사는 오랜 시간 동안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실태조사이나, 조사 대상 및 표본이 일관성없다는 점, 기혼과 미혼의 표본이 구분되어 있고 출산력 측정에서 미혼 남녀가 표본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18년 조사를 수행할 당시 조사 명칭,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에 관해 쟁점이 있었다. 우선, ‘출산력’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출산력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갖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학술적 용어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출산력이라는 명칭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소영 외, 2018). 또 조사 내용에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문항(‘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사 대상에서도 만 15~49세 기혼 여성만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역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지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사 방법에 있어서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출산력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21년에 이르러 조사의 방향성을 크게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조사 명칭, 조사 내용, 조사 대상에서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 환경과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시계열 유지라는 강점을 흐드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2021년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변화를 알 수 없으나 출산력조사는 3년마다 수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임에는 분명하다.

2. 국내 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⁴⁾

이 절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패널조사와 인구 현상과 관련이 깊은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주요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인구패널 구축 가능성과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4) 이 절은 김종훈 외(2018),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의 “제3장 국내외 주요 패널 및 인구 관련 자료”(p.49~59)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힘.

대상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널로 평가받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여성의 출산을 비롯한 주요 인구학적 현상을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이다.

가. 조사 개요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1차 본조사가 시작되어 2020년 기준 15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가구를 조사 단위로 매년 1회 조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pp.4~5).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장기간의 패널을 구축한 조사이다. 조사의 기본 단위는 가구이며 매년 1회 조사하고 있다. 1998년에 시작한 표본 기준으로 2019년에 22차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1).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에 1차 본조사를 시작하여 2018년에 7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단위는 가구를 기본으로 한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매년 조사하였지만, 이후부터는 격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20, p.19). 세 가지 패널조사 모두 조사 단위는 가구이며, 가구 내의 개인을 별도로 조사하기도 한다.

〈표 3-5〉 패널조사별 개요(2020년 기준)

조사명	본조사 시작 연도	조사 단위	조사 주기	현재 차수	조사 방법	수행 기관
한국노동패널	1998년	가구(개인)	1년	(98표본) 23차	CAP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복지패널	2006년	가구(개인)	1년	15차	CAP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007년	가구(개인)	2년	8차	CAP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김종훈 외(2018),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 p.52 〈표 3-2〉를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여성가족패널 1~7차 웨이브 User's Guide.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나. 조사 목적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p.1~3).

2)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이 계층들의 규모와 생활실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과 기존 제도의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한다(여유진 외, 2020, p.14~15).

3)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목적은 '여성의 삶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여성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사는 여성의 경제 활동(고용) 이력, 가족 가치

관, 가족 구성과 구조를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변화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조사는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포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pp.65~66: 김종훈 외, 2018에서 재인용).’

다. 조사 대상과 규모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은 ‘1998년 원표본’, ‘2009년 통합표본’, ‘2018년 통합표본’ 등 크게 세 가지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표본(98표본)은 1998년 최초의 조사에서 시작한 도시 거주 5,000 가구,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다. 원표본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09년에 신규로 표본(1,415가구)을 추가하여 통합표본(09통합표본)을 구성하였다. 추가된 표본도 신규로 추가된 원가구, 분가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2).

2018년에는 20년이 된 원표본의 표본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자 5,044 가구로 추가표본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년도부터 조사한 원표본(98표본), 2009년에 표본을 추가한 통합표본(09통합표본), 2018년도에 표본을 추가한 통합표본(18통합표본)의 3개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p.3~4).

2)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구축한 원표본 7,072가구와 해당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후 원표본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7차 조사에서 1,800가구와 해당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추가하였고, 이후 계속 조사하고 있다(여유진 외, 2020, p.23). 한국복지패널조사 대상의 특징은 전체 표본의 약 50%를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할당한 점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복지실태와 욕구 파악이라는 조사 목적을 고려한 표본 할당 방식이다(여유진 외, 2020, p.29).

3)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원표본 9,068가구 중에서 조사 불가 가구를 제외한 총 8,877가구와 해당 가구 내 만 19~64세 여성 전체(1차 연도 10,446명)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가구와 가구 내 여성만을 조사하는 것이 여성가족패널의 특징이다. 여성가족패널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조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p.19).

라. 조사 내용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며, 크게 가구 조사, 개인 조사, 직업력 조사, 부가조사의 4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44). <표 3-6>은 각 자료의 주요 구성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의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과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46).

개인용 자료는 응답자의 조사 당시 주된 일자리의 특성,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한 문항(예: 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p.46~48).

본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자료에서 유사한 내용을 매년 반복 조사하는 반면, 3차 연도인 2000년부터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청년층, 건강과 은퇴, 중고령자, 근로 시간과 여가 등 새로운 주제 또는 동일한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조사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p.106~112).

〈표 3-6〉 한국노동패널 자료 구성

구분		내용	
가구용 자료	KLIPS H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 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 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의사결정(20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고용형태(21차) 비임금근로자(22차)
직업력 자료	KLIPS 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 1-22차 연도 조사자료 User's Guide. p.44~45.

2)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크게 가구 조사, 개인 조사, 부가 조사 등 3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15). 가구용 자료는 가구의 소득, 지출, 재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과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건강상태, 경제활동 상태, 성,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수집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23). 개인용 자료는 사회보험, 근로, 생활실태, 가족관계 개인사 등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46~48). 가구용, 개인용 문항은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지만, 아동 부가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는 3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106~112).

〈표 3-7〉 한국복지패널 자료 구성

구분		내용	
가구용 자료	Koweps_H	가구 특성 정보(부채, 소득, 소비 등) 및 가구원 기본정보	
개인용 자료	Koweps_P	근로 및 사회보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생활습관, 개인사 등	
부가조사 자료	Koweps_C Koweps_WC Koweps_DA	아동(2006년 이후 3년 단위)	학교생활,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등 건강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활동 등
		복지인식(2007년 이후 3년 단위)	사회, 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제원 및 대상 범위 등
		장애인 (2008년 이후 3년 단위)	장애원인 및 상황 일상생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2020) 2021년 한국복지패널 15차 연도 조사자료 User's Guide. p.27-23.

3)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크게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여성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조사로 구분되며, 주제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의 조사표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사로 구분된다. 가구 조사는 여성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태(가구 소득과 지출, 가구 자산과 부채 등), 주거 상태(주택 점유 유형 등)를 포함한 일반 사항과 가구원의 일반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는 여성 개인의 교육, 경제활동, 결혼, 가족, 가치관, 건강 상태, 여가 생활, 노후 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조사는 여성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고용 이력, 교육과 직업 훈련, 일·가정 양립 등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pp.65~66).

〈표 3-8〉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구성

구분	내용		
가구용 자료	KLoWF_H	가구 특성(소득, 소비, 부채 등)	
개인용 자료	KLoWF_P	일반 특성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	
일자리용	KLoWF_Job_history KLoWF_Birth_history	직업력	경제활동 및 주된 일자리 교육훈련 및 사회보험 등
		출산력	출산과 일 출산경험과 자녀 등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KLoWF 여성가족패널 1~7차 웨이브 User's Guide.

마. 패널 관리 및 운영 방식⁵⁾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 패널 데이터 연구실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패널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원내 패널운영위원회에서 한다. 패널 데이터 연구실은 노동패널팀과 사업체패널팀이 있으며, 노동패널팀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전담 관리하며, 실장 1명, 실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업무는 팀원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패널실 소속 연구원은 다른 연구 참여 의무나 부담 없이 패널 운영 관리업무만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는 매년 품질개선 연구를 통해 관리하며, 패널자료 비교연구와 노동패널 워킹 페이퍼, 심층 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패널 데이터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운영 및 데이터 추출틀인 smart-klips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패널 데이터의 해외 이용자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 방식은 Cross National Equivalent Unit(CNEF)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패널 데이터 운영 및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CNEF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의 해외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5) 패널 관리 및 운영 방식에 기술한 내용은 해당 패널사업 책임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문했던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한 것임

2)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에서 연구를 총괄하고, 통계개발관리센터와 사회조사팀에서 조사업무를 관리한다. 서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운영협의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복지패널협의회와 패널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설계, 설문 변경 및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어도 조사설계의 일관성 유지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설문설계 및 수정은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패널협의회와 패널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구는 소득보장정책 연구실에서 박사급 인력 1명과 석사급 연구인력 4명과 조사센터 인력 3명이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교수 5명, 석사급 연구원 3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형태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책임자는 2년 임기로 순환하여 연구책임 및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를 2년 임기로 순환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내부 기관에서 패널조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무분장은 박사급 1인이 조사연구총괄, 패널 심화분석, 학술대회 관리, 데이터 워크숍 등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석사급 연구원은 데이터 클리닝, 기초분석, 홈페이지 운영, 품질진단, 각종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부가조사 및 사회서비스영역 설문 설계 및 수정, 관련 영역 데이터 클리닝, 기초분석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연구인력 구성은 자유로운 편이다. 표본설계와 가중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의 표본설계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의 조사팀이 조사원 인력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조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조사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1차 복지패널조사부터 참여한 조사원이 지속해서 패널조사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패널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패널 학술대회와 대학원 학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복지패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 복지패널 사용자를 위한 패널 방법론 워크숍과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패널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복지패널조사 설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해외 이용자의 활용도를 증진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PSID 연구팀과 일본 게이오패널(Keio Household Panel Study)과의 공동학술교류를 개최했으나 정기적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패널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을 진단하는 연구는 심층분석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각종 학술대회와 데이터 설명회에서 패널자료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다. 패널 품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패널이탈로 인한 대표성 손실 문제다. 다른 패널과 마찬가지로 복지패널 또한 원표본의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사선물, 안부전화, 명절선물(추석, 설), 응답인센티브(농협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조사패널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3)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 센터에서 과제를 전담관리하고는 있으나 다른 실에서도 조사는 가능하다. 2021년 현재 연구인력은 7~8명으로 운영중이며 박사급 5명, 석사급 2명, 외부 연구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사급 인력은 패널조사 심화분석, 학술대회 및 데이터 워크숍 및 working paper 등을 담당한다. 석사급 인력은 데이터 클리닝, 기초분석, 홈페이지 운영, 품질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표본 설계와 가중치 계산 업무는 외부의 객원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순환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2021년까지 총 4회 변경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표본설계, 설문지 구성 및 수정, 가중치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패널조사 및 관리는 외부 조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순환되어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전공영역을 가진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해당 연도 조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진이 직접 심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설문지 개발(예: 부가조사)과 향후 패널 설계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부 패널 관리에서 한계도 있다. 외부 조사업체에 패널조사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패널 관리의 전문성을 연구원 내에 확보하지 못하고 조사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가중치 계산 등 패널 분석 및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대학원 학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전문가 대상의 학술심포지엄 또는 일반 연구자 대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패널자료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working paper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자유주제 또는 조사 연도에 필요한 주제를 다룬 working paper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매년 2~4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패널분석 방법론을 교육하는 위

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를 위해 영문화된 표준데이터와 관련 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패널조사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교류하고 있다. 2010년에는 호주 WHA(여성건강패널) 기관 방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호주 뉴캐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 해외 패널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학술대회 개최하였으며, 호주 뉴캐슬대학교 공동으로 한국호주 간 여성건강 관련 패널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패널의 질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그 이상 주기로 패널 품질을 진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이 패널이탈 사례분석, 패널 대표성 검증 등을 시행한다. working paper 또는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심화 분석에서 밝혀진 패널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패널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이사선물, 생일카드,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소식지 발송, 조사 완료 시 감사 전화 등 일상적인 패널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바. 표본추출과 패널 개선 노력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와는 달리 최초의 표본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다. 따라서 패널조사는 최초 표본의 구축과 원표본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원표본의 유지 비율이 감소하면 패널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패널은 원표본 유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복지패널과 여성가

족패널은 1회씩 신규표본을 추가했으며,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두 차례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 서는 세 가지 패널조사의 표본 구축의 특징, 원표본 유지 상태, 표본 개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에 활용했다. 관련 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 21,938개 조사구 중에서 전국 도시 지역 19,025개 조사구(시의 동지역 17,353개 조사구, 시의 읍면지역 1,672개 조사구)를 표집틀로 구성했다. 표본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및 15세 이상 개인이다. 제주도, 병역의무이행자, 시설 거주가구(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16).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5,000가구로 출발하였고,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한 경우 원가구원이 존재하는 한 지속해서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패널은 원표본 유지율이 데이터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한국노동패널은 원표본 유지율을 위해 조사원 교육, 조사수당 이외에 이사선물, 조사수당 상향 지급,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11차 조사에서 원표본 중 3,710가구가 유지되어, 표본 유지율은 74.2%였다. 가장 최근인 2019년 22차 조사에서는 1차 연도 원표본 유지율은 65.3%였으며,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 표본 가구(22차 연도 4,604가구) 대비 표본 유지율은 70.9%였다. 2009년에는 감소한 원표본 가구를 보완하기 위해 1,415가구를 추가하여 원표본 가구와 통합한 통합표본(09통합표본)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09통합표본은 2009년에 구축된 원표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다시 한번 표

본 이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5,000가구의 대규모 표본추가(18통합 표본)를 진행하였다. 2019년에 실시된 제22차 KLIPS 조사에서 18통합 표본은 원표본 11,471가구 및 분가한 112가구를 합하여 총 11,58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성공하였고, 원표본 유지율은 94.5%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23).

2) 한국복지패널조사

가장 최근에 결과가 보고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9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섬을 제외하고, 특수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23만여 개 조사구를 표본추출 틀로 삼아 표본을 추출하였다(여유진 외, 2020, p.30).

표본추출은 다음의 2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1단계 작업은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활용하여 517개 조사구를 선정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487개의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2단계 작업은 중위소득 60% 이상 일반 가구와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여 일반 가구 3,500가구와 저소득 가구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추출하는 것이다(여유진 외, 2020, pp.30~31).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소득 가구를 과대추출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패널에 대규모로 포함됨에 따라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원표본 유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한 차례 신규표본을 추가했다. 2006년에 구축하였던 원표본은 7,072가구였으나, 2011년 원표본 유지율이 75% 이내로 하락함에 따라, 2012년 조사를 수

행할 시점에 신규표본을 1,800가구 추가했다. 2019년 15차 조사를 수행할 시점의 대상 가구 규모는 6,460가구였고, 2019년 조사 완료 가구 중에서 원표본 가구는 3,865가구로 최초 7,072가구 대비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54.7%로 나타났다(여유진 외, 2020, p.26).

3)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인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가구다. 여성가족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약 26만 개의 일반조사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1차 표본조사 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s) 추출을 위해 '도시화의 수준,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주거형태별 가구 비중,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 가구의 성별'을 기준으로 시도별 조사구로 층화한 후 다시 가구 수에 따른 조사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1,700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p.25).

여성가족패널 또한 패널의 특징상 표본 소실 발생으로 원표본 유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2018년도 8차 조사 때 2,096가구와 2,621가구원을 신규표본으로 추가했다(주재선, 김영란, 송치선, 한진영, 손창균 외, 2017. p.49). 2018년 7차 조사 결과 원표본 전체 9,068가구에서 조사 불가 가구와 패널 탈퇴 요구 가구, 합가 소멸 가구를 제외한 8,384가구 중 조사된 원표본은 6,031가구로 원표본 유지율은 71.9%를 나타낸다(주재선, 이동선, 송치선, 박건표, 이진숙, 박송이 외, 2020, p.28).

바. 시사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패널조사는 내용적 측면에서 인구 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인구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되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 같은 사건(event)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결혼, 출산, 가족의 형성과 해체 등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욕구를 주된 주제로 조사하며,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과 경제활동을 주된 주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구 현상과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패널의 경우는 여성의 건강과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구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성만이 조사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 현상과 직결된 항목들을 조사 내용에 포함한 패널을 구축하여 인구 현상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구패널 구축 및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1회성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는 패널 구축 이후 표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충분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모든 패널은 패널 가구원의 사망, 이사로 인한 추적 어려움, 노령화로 인한 노후화, 장기조사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패널 표본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패널 손실은 표본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표본의 이탈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 패널 모두 패널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명절선물이나 이사선물 및 안부확인 전화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패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2절 국외 사례

이 절에서는 횡단조사 방식으로 1990년대 말까지 수행된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 FFS)와 이를 이어서 2000년대 들어 종단(longitudinal)조사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

가. 개요⁶⁾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는 1990년대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조사이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에서 유엔인구활동국(Population Activities Unit: PAU)의 협조를 받아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의 재정지원으로 수행하였다. FFS는 UNECE 회원국에서 출산과 가족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FFS 프로그램은 20개의 ECE 회원국에서 비교할 만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표준화된 각 국가용 FFS를 만들고 PAU에 표준화된 각 국가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표준화된 각 국가의 FFS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국제

6) 개요는 UNECE, 2002,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About the Programme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FS가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에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유럽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효과적인 피임도구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UN이 FFS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되었던 조사는 1965-1972년에 수행되었던 비교출산력조사(Comparative Fertility Survey: CFS)와 1975-1981년에 수행되었던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 WFS)가 있다. 우선, CFS는 앞에서 언급한 1960년대 유럽의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45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어서 수행된 WFS는 개발도상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통계국(International Statistical Insitut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국제적으로 62개국이 참여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1974년에 「한국출산력조사」라는 명칭으로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를 통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는 경제기획원과 가족계획연구원(1977)의 보고서에서 분석되었다(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p.24).

UNECE는 1987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Population and Development)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출산력 및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FS의 후속 조사로서 FFS를 시작할 것을 논의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은,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상승, 이혼의 증가, 비혼 및 동거 가구의 증가로 인한 비혼 출산과 무자녀 증가 등 가족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Festy and Prioux, 2002, p.7). UN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출산 행동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력조사로서 ‘출산력 및 가족조사’(FFS) 프로젝트가 설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CFS

와 WFS처럼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FFS는 조사 대상을 다양한 혼인 상태에 있는 응답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가구로 구성하게 되었다(Festy and Prioux, 2002, p.4).

FFS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24개국의 참여로 수행되었다(도세록 외, 2013, p.33). FFS 데이터 생산을 통해 각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국제비교의 수준에서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고 2000년에 마지막 컨퍼런스를 하면서 FFS는 끝이 나고, 세대와 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나. 조사 대상 및 표본⁷⁾

FFS에 참여한 국가와 각 국가별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1990년대 UNECE 회원국 54개 국가 중 23개 국가와 UNCE 회원국이 아닌 뉴질랜드가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과 표본 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는 남성을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 대상의 연령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표 3-9〉 FFS 참여 국가와 국가별 조사 대상

참여 국가	참여 기간	여성	남성	연령
오스트리아	1995-96	4,500	1,500	20-54
벨기에	1991-92	3,200	2,200	21-40
불가리아	1997-98	2,500	0	18-40
캐나다(1)	1990	4,900	4,100	15-54
캐나다(2)	1995	4,200	3,700	15-54

7) 조사 대상 및 표본은 UNECE, 2002,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Survey Design과 Festy, P. and Prioux, F., (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New York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여 국가	참여 기간	여성	남성	연령
체코공화국	1997	1,700	700	15-44
에스토니아	1994	5,000	2,500	20-69
핀란드	1989~90	4,200	1,700	22-51
프랑스	1994	2,900	1,900	20-49
독일	1992	6,000	4,000	20-39
그리스	1999	3,000	1,000	18-50
헝가리	1992~93	3,600	1,900	18-41
이탈리아	1995~96	4,800	1,200	20-49
라트비아	1995	2,700	1,500	18-49
리투아니아	1994~95	3,000	2,000	18-49
네덜란드	1993	4,500	3,700	18-42
뉴질랜드	1995	3,000	0	20-59
노르웨이	1988~89	4,000	1,500	20-43
폴란드	1991	4,200	4,300	18-49
포르투갈	1997	6,000	3,000	15-54
슬로베니아	1994~95	2,800	1,800	15-45
스페인	1994~95	4,000	2,000	18-49
스웨덴	1992~93	3,300	1,700	23-43
스위스	1994~95	3,900	0	20-49
미국	1995	10,500	0	15-44
합계(24개국)	1988-1999	102,400	48,000	15-69

자료: UNECE(2002). FFS Survey Design.

표본추출 방식에 있어서도 FFS에 참여한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가구를 추출하고,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 대상자를 구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 가구당 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폴란드의 경우는 표집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 대상이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표집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 중 최대 3명까지가 대상이었다.

〈표 3-10〉 FFS 참여 국가별 표집 단위

참여 국가	표집 단위
벨기에	개인
캐나다	가구 당 1명의 개인
체코공화국	개인
에스토니아	개인
핀란드	개인
프랑스	가구 당 1명의 개인
독일	가구 당 1명의 개인
그리스	가구 당 1명의 개인
헝가리	개인
이탈리아	개인
라트비아	혼합 방식(개인 및 가구)
리투아니아	가구 당 1명의 개인
네덜란드	가구 당 1~3명의 개인
뉴질랜드	가구 당 1명의 개인
노르웨이	개인
폴란드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포르투갈	가구 당 1명의 개인
슬로베니아	가구 당 1명의 개인
스페인	가구 당 1명의 개인
스웨덴	개인
스위스	가구 당 1명의 개인

주: FFS에 참여한 24개 국가 중 표집 방법이 보고된 나라만 포함.
 자료: Festy, Prioux (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p.16.

다. 조사 내용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FFS의 모델이 되는 조사 문항이 개발되었다. FFS의 조사 문항은 핵심 필수(core) 문항과 모듈(module)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문항은 여러 차례의 사전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핵심 문항 영역과 4개의 선택적인 모듈로 구성되었

다. 핵심 문항 영역은 가구 일반 사항(Household Characteristics), 부모의 가구 사항(Parental Home), 파트너십 관련 사항(Partnerships), 자녀 관련 사항(Children), 임신력(Other pregnancies), 피임 및 임신 조절 관련 사항(Fertility regulation), 자녀 가치관(Views on having children), 기타 가치관(Other views),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사항(Education and occupation), 배우자 관련 사항(Partner characteristics)이다. 4개의 모듈은 이동 및 이민력(Migration History), 피임력(Contraception History), 가치관 및 신념(Values and Beliefs), 인구 정책의 수용도(Population Policy Acceptance)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 문항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체로 임신중절(abortion)과 피임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국가마다 조사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정도의 차이이다.

라. 시사점

FFS는 유럽의 방대한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Festy and Prioux, 2002). 이전의 조사에 비해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력 중심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혼인 상태에 있는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사와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Festy and Prioux, 2002). 즉, 이전에는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가족 내의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에만 조사가 집중해 있었던 반면, FFS는 한 부모,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을 대

상으로 출생과 성장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다만,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사항에 있어서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덜 지속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남성은 과소 표집되었다. 또한, 여전히 가임기 연령(fertile ages)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의 연령이 정해져서 주연령(prime age) 중심의 고전적 접근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이 끝나도 지속되는 가족의 생애에 충분한 관심이 부족했다.

향후 조사를 위해 FFS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의 일관성과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할 때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 FFS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동일한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본설계가 통일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응답을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현장에서 적용할 지침이 필요하다. 즉, 조사원에게 최소한의 방문 횟수 등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무응답을 데이터화할 때 국가 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무응답을 대체하고 사후 증화할 때 국가 간 공유하고 일관되게 설계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FFS는 출산력과 가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국가 내에서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가. 개요⁸⁾

2000~2003년 유엔인구활동국(PAU)는 FFS를 계승하기 위해 세대와 성에 관한 프로젝트(Generations and Gender: Research into their behaviour and quality of life)를 시작하였다.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FFS를 계승하고 정교화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Vikat et. al., 2007). 이에 따라 GGS 데이터는 FFS의 데이터와 일부 호환이 가능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GGS는 2000년 유엔유럽 경제위원회(UNECE)의 인구국(Population Unit)에서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는 UNECE와 네덜란드 인구연구소(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NIDI)와의 협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GGS는 현재 세대와 성 프로그램(Generations & Gender Programme)하에 NIDI가 중심이 되어 유럽의 많은 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가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다.

GGS를 수행하는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의 협업 기관(consortium partner)은 다음과 같다. 협업 기관은 각 나라의 인구 관련 연구소와 대학이다.

8) 개요는 Generation & Gender Programme(<https://www.ggp-i.org/about/>)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3-11〉 GGP 협업 기관

국가	기관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NIDI)
에스토니아	Tallinn University
오스트리아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크로아티아	Zagreb University
독일	Federal Research Institute of Demography(BiB)
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tudes demographiques(INED)
헝가리	Hungarian Demographic Institute
이탈리아	Bocconi University
폴란드	Warsaw School of Economics
스웨덴	University of Stockholm

자료: 필자 작성.

GGP를 수행하는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⁹⁾ 첫째, ‘거버넌스 체계’는 컨소시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컨소시엄 이사회는 GGP의 궁극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며 1년에 한 번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콘텐츠, 재정, 지적 재산권 등 필수 사항을 결정한다. 총 책임자(director)는 연구 인프라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컨소시엄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실행하며, 중앙 코디네이션팀(central coordination team: CCT)을 이끌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컨소시엄 이사회에 주요 사항들을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최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총책임자, 컨소시엄 이사, GGP 위원회(council)의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운영 체계’는 중앙 코디네이션팀(CCT)과 노드(nod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코디네이션팀은 GGP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세 노

9) 해당 내용은 GGP orgaigram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https://www.ggp-i.org/about/organisation/>)

드는 CCT에 기술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현재 설문 문항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일인구연구소(BIB),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랑스 인구연구소(INED), GGP 파트너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UNECE이다. 셋째, ‘GGP 커뮤니티’는 연구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들과 GGP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GP는 국가 및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예: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윤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윤리 위원회와 인프라 작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GGP는 거버넌스 체계, 운영 체계, 커뮤니티로 구분되어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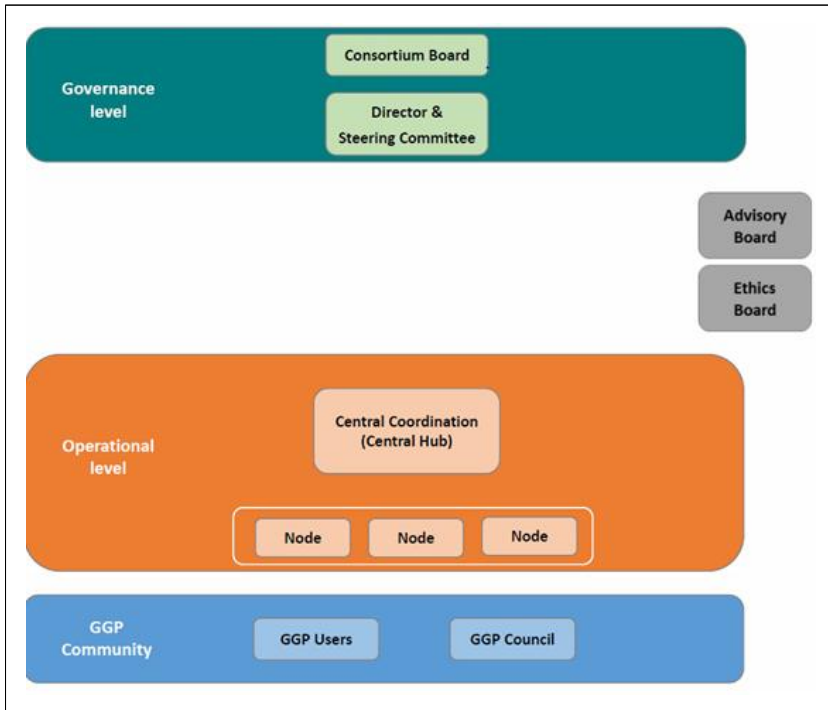
GGG의 목적은 ‘인구와 가족 변동(dynamics)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여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에 있다(김종훈 외, 2018, p.67). GGG는 국가별 18~79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대표 표본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패널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4~2011년까지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3년마다 총 세 번(wave1, wave2, wave3)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고 2020~2021년간 17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체코 공화국, 호주, 홍콩, 에스토니아, 몰도바, 우루과이, 벨라루스 공화국)이 조사를 수행하였고 일부 국가들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웨이브(wave)의 2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공화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의 데이터와 두 번째 웨이브에 참

여한 14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의 데이터가 현재 공개되어 있다.

[그림 3-1] GGP 운영체제도



자료: GGP홈페이지(<https://www.ggp-i.org/about/organisation/>에서 2021. 5. 17. 인출)

나. 조사 대상 및 표본

현재까지 24개국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18~79세 남녀로 국가당 8,000~10,000명의 대규모 표본을 조사한다. 2021년 현재 GGS 두 번째

라운드와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조사 대상 연령 기준과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3-12〉 2021년 현재 GGS 참여 국가별 조사 대상 및 표본추출 방식

국가	표집 방식	조사 대상(연령)
오스트리아	개인	18-59
벨기에	개인	18-59
덴마크	개인	18-59
핀란드	개인	18-54
프랑스	개인	18-59
독일	가구	18-49
아이슬란드	개인	18-59
네덜란드	개인	18-59
노르웨이	개인	18-54
스웨덴	개인	18-59
영국	가구	18-79
벨라루스	가구	18-79
크로아티아	개인	18-59
에스토니아	개인	18-59
헝가리	가구	18-59
카자크스탄	가구	18-79
라트비아	가구	18-79
리투아니아	가구	18-79
몰도바	가구	18-79
폴란드	가구	18-59
캐나다	가구	18-79
홍콩	가구	18-59
타이완	가구	18-59
우루과이	가구	18-79

자료: 필자 작성.

다. 조사 내용

2020년 이전의 첫 번째 라운드에 참여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질문한 GGS의 1,000개 이상의 핵심(core)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표 3-13〉 GGS 주요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 관계(부모의 관점 및 자녀의 관점)- 파트너 관계- 젠더 관점- 파트너십의 복잡성과 출산 이력, 재혼가족(stepfamilies)- 피임과 난임, 인공임신중절-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단위로서의 가구 사항- 주거 사항- 경제활동 관련 사항- 소득 및 자산- 교육 상태- 건강 상태- 개인의 사회관계망- 주관적 만족도(삶의 질)- 복지 제도- 가치관(종교, 결혼, 자녀, 가족, 공적 도덕, 신뢰도, 세대 간 관계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등)
--

자료: Vikat et al (2007).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2020년부터 시작한 두 번째 라운드의 조사 내용은 이전 조사와의 비교 가능성과 지속성(시계열 유지)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4〉 2020년에 추가된 GGS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응답자의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의도, 이사 또는 이민의 이유)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이성과의 만남(온라인데이트 포함)
생애사 (life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거 자녀의 거주상황 - 디지털을 활용한 개인 사회적 네트워크 사용 - 자녀의 건강
출산력 (fert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선호 시기 - 난임, 불임 - 성적 자율(피임에서의 자기결정) - 첫 월경시기, 변성기, 갱년기 - 개인적 또는 일반적 이상 자녀 수 - 가족계획 관련 미충족 욕구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결혼, 이혼, 첫 자녀 출산(입양) 날짜 - 아동기에 3개월 이상 떨어져서 산 경험
건강 및 안녕(wellbe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의 자율성(자기결정) - 행복 - 외로움
일(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 고용 형태(정규직, 장기 또는 단기 계약직) - 향후 1년간 실직 가능성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의 예측되는 재정 상황 - 물질적 또는 사회적 박탈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신뢰 - 미래에 대한 계획 - 종교, 신앙 - 성 규범(gender norms) - 유급 노동의 성별 구분에 대한 태도
개별 국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국가별 모듈 - 코로나19의 영향(개인의 삶의 질, 파트너 및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자료: <https://www.ggp-i.org/wp-content/uploads/2021/04/Whats-new-in-the-GGS-2020.pdf> 에서 2021. 6. 20. 인출.

라. 시사점

GGs의 강점은 횡단적, 종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개별 국가의 인구 변화는 다른 나라의 인구 변화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 변화의 차이는 각 국가의 제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한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정책적인 특징이 세대와 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이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GGs는 1990년대 생산된 FFS 데이터와 병합이 가능하여 오랜 기간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GGs는 3년 간격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조사하는 종단조사로서의 강점이 있다. 한 개인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또는 의도 및 계획이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생애과정 접근에 따라, 출산 행동에 대한 여타 생애과정 요인의 영향과 거시 및 중범위 요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태도 및 가치관과 출산 행동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나, 가치관은 사후적 정당화 때문에 회고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조사를 통해 출산에 선행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통해 생애과정 변화와 출산 행동의 변화 사이의 정교한 인과분석을 할 수 있다.

GGs 데이터는 대표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이다. 표본은 국가 당 평균 10,000명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크며, 조사 대상은 18~79세로 연령대가 넓기 때문에 전 생애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복잡성과 하위 집단을 포착하며, 세대 간 이전과 지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Gs를 통해 20개 이상의 국

가에서 참가한 약 20만 명의 개인으로부터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생활 및 가족력 데이터가 구축되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426개의 관련 논문이 출판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⁰⁾ 또한, GGS 데이터는 인구와 가족 변동(dynamics)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구축되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GGS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출판된 논문은 자연실험이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연구 등 다양하다.

10) GGP,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https://www.ggp-i.org/form/publications/>에서 2021.12.17. 인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제1절 인구조사 데이터로서의 인구패널
제2절 인구패널 구축 및 관리 방안

제4장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제1절 인구조사 데이터로서의 인구패널

본 절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로서 인구패널의 개념과 법적 근거, 목적과 역할에 관해 선행연구, 자문회의,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는 1차 조사 10명, 2차 조사 45명의 인구학, 경제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 분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1. 개념 및 법적 근거

인구에 관한 통계는 인구동학적(population dynamics)인 것과 인구정학적(population statics)인 것으로 구별된다. 인구동학에 관한 통계는, 인구 규모, 인구구조, 인구 분포 등 인구정학적인 요소들을 변동시키는 결혼, 이혼, 출산, 사망 같은 사건(event)에 관한 통계이다. 즉, 인구동학적인 사건이 일정 기간(주로 1년이나 1개월 단위)에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된 결과를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인구동향통계가 있다. 출생 통계, 혼인 통계, 이혼 통계, 사망 통계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는 「인구동향조사」로서 국민들이 각 인구동학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군·구청 또는 동·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입과 전출(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이민)을 의미하는 이동(migration)은 건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인구동학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은 인구동학통계가 아닌 별도의 「인구이동통

계」로 구분한다. 한편 인구정확통계는 어느 특정 시점(일자·시·분·초)에서 시간을 정지시킨 후, 그 시점에서의 인구 상황을 보여주는(snapshot view) 것이다. 여기에서 인구정확적인 상황은 크게 인구 규모, 인구구조(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등 특성별 구성을 의미함), 인구 분포(공간적인 인구 구성을 의미함)로 구분한다. 이러한 인구정확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부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주민등록인구」가 대표적이다.

인구 규모의 감소,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현상은 인구동학적인 사건들이 변화한 결과로서 일정 시점마다 인구정확적 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인구 현상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인구학적인 원인(혼인, 이혼,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동학적 요인의 변화)들에 의해 초래되며, 이들 인구학적 원인(인구동학적 요인) 각각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즉, 인구정확요인은 종속변인이며, 인구동학요인은 매개변인이고, 경제·사회·문화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인들은 설명변인으로서 상호 인과관계의 구조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패널조사는 고정된 조사 대상(패널)에 대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조사문항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조사이다. 패널연구는 횡단적인 단위(예를 들어 개인, 가구, 기업, 산업, 국가 등)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구성원들을 복수 연도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는 행위로 정의된다(신동균, 1998).

이상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인구패널조사는 인구정확적인 모습(인구 규모, 구조, 분포 등)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구동학적인 사건(혼인, 이혼, 출생, 사망, 이동 등)들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동적인 차원에

서 조사한다는 개념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인구패널의 구축,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구패널의 필요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적정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에서는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인구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2. 필요성, 목적 및 역할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 중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생일 것이다. 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사안인데, 이에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적 관점에서 조사 시점에서의 정태적 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패널조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실제로 인구조사 데이터의 충분성과 필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인구패널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의 인구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구조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6.7%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전문가의 97.8%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인구패널조사가 필요하다(필요 46.7% 및 매우 필요 51.1%)고 하였으며, 93.3%가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필요 42.2% 및 매우 필요 51.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만혼화와 비혼화 및 저출산 등 새로운 인구 현상이 심화해가는 과정에

서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 2005년 이래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 조사들의 조사항목 중 일부를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할애하였다. 전자는 대표적으로 2005년과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가 있다. 후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점으로, 출산력 등 인구 관련 조사는 횡단적인 조사만이 실시되었다. 횡단적인 조사는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사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시점 당시 인구동학적인 상태에 대해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가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의 변화가 미친 영향, 즉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패널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사들은 각각 고유한 목적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조사항목들을 선정 및 배치한 관계로 저출산 등 인구 변화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국내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관련 패널들은 특정한 주제(영역)와 특정 인구집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 변동의 동태적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관련 조사항목들을 추가한 경우에도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목들이 우선시되어 출산 등의 인구 변동과 연계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그로 인하여 저출산 등의 원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시작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일-가정 양립 현상을 파악하고, 여성의 삶을 경험적으로 규명

하여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 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 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아동패널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에서 2021.11.30. 인출).

결혼,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요인들의 변화는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간주된다. 그만큼,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특화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인구동학 요인들의 변화가 동적인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등과 강한 인과관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종단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패널조사를 통해 모든 인구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인구패널에 모두 포함하여 조사할 수도 없으며, 인구패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인구 현상과 관련된 심도 있는 정보의 산출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노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구패널조사는 횡단적인 실태조사에 비해 가족의 교육,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육아와 가족 돌봄, 가사활동, 가족관계,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생활실태와 혼인, 이혼, 출산, 이동,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상황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인구동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동학적인 상황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특성 변화 간의 상호연관성,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인구패널조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인구정책 등을 수

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인구패널조사의 세부적인 기대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인구패널조사의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인구동학적인 변화의 특징 및 원인들을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셋째,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DB(database)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인구 현상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다섯째, 인구, 가구 등 미래 인구정학적인 요인들의 향후 변화에 대한 가정(시나리오)을 설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절 인구패널의 구축 및 관리 방안

1. 조사 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인구패널조사 대상자 구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시작 연령은 대체로 20세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일부 15세, 18세, 19세 등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의 상한은 49세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50세, 60세를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을 20세부터 시작할 때, 20세의 패널 유지를 위해 분가가구와 분가가구의 분가가구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본 수는 10,000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여 전문가 조사에서 60% 이상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조사의 영역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영역은 가구와 가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동거와 관련된 사항, 이성교제에 관한 사항, 결혼·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항,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사항, 가치관과 태도, 건강에 관한 사항, 세대 간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1〉 조사 영역 및 항목

영역	항목
A. 가구 사항	동거 가구원에 관한 사항(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등)
	비동거 가족에 관한 사항(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비동거 시기, 이유·지역 등)
	출생지(다문화 가구), 장애 및 돌봄 필요 여부
B. 가구 일반특성	주거, 주택 현황
	소득, 지출, 부채, 자산
	물질적 또는 사회적 박탈감
	상세 거주지 주관적 사회계층
C. 동거 (파트너 쉽)	부모로부터의 독립시기 및 상황
	현재의 동거 상태
	14세 무렵 경제상황
D. 이성 교제	과거의 이성교제(교제 기간, 이성교제의 목적, 피임, 데이터 폭력 등)
	현재의 이성교제(교제 기간, 이성교제의 목적, 피임, 데이터 폭력 등)
	관련 정책 이용 경험
E. 결혼	결혼 전 거주지
	결혼(동거, 혼인신고, 결혼식 등)
	결혼 이력
	결혼 비용(남녀 간 비용 부담 방식 등), 당시 주거현황 및 자금 마련(대출 등)
	결혼 지원 정책(필요성, 인지도, 정책 수요)
결혼 이유	
F. 임신, 출산, 피임	임신 이력
	출산 결과(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등)
	생식건강(첫 월경 시기, 변성기, 갱년기, 비뇨기학과 경험, 성매매 감염병 이력 등)
	피임(피임 경험, 목적, 방법, 자기결정권)

영역	항목
	난임(경험, 검사, 치료 과정 및 결과) 관련 정책 이용 경험
G. 산전, 산후 관리	산전 관리(산전 진찰 장소, 초진 시기, 횟수) 분만(장소(병원 주소), 방법, 결과) 임신출산 지원 정책(필요성, 인지도, 정책 수요) 산후 관리(진찰, 산후우울, 산후조리) 수유(모유수유, 수유 형태) 배우자(남편) 및 가족(조부모)의 역할 관련 정책 경험(본인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H. 자녀 양육	부부 간 육아, 가사 분담 자녀의 돌봄 현황(이용 기관 및 서비스 등) 자녀 양육 비용 보육 지원 인력(조부모, 도우미, 기관 등) 보육 애로점 보육 지원 정책(필요성, 인지도, 정책 수요)
I. 일·가정 양립	취업 현황(본인과 파트너) 결혼 전후 근로 상황 임신, 출산 전후 근로상황 근무지와의 이동거리와 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필요성, 인지도, 정책 수요)
J. 가치관 및 태도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결혼의 의미 결혼하지 않은 이유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자녀계획(계획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직업 관련 가치관, 태도 사회적 신뢰 인구 변화에 대한 가치관, 태도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성 규범(gender norms), 성 역할
K. 건강 및 안녕 (wellbeing)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행동 여가 생활(취미) 행복(삶의 만족도) 건강 관리의 자율성(자기결정)

영역	항목
L. 세대 간 관계	부모의 일반사항(거주지, 교육수준, 근로 현황, 소득 수준 등)
	부모와의 관계
	세대 간 자원의 이동(물리적, 경제적 도움 등) 세대 간 협력과 갈등
M. 부가	코로나의 영향(개인의 삶의 질, 파트너 및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
	AI와 가족, 성, AI기반의 노동환경 변화와 일가족 양립, 세대 간 협력과 갈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자료: 필자 작성.

전문가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제안된 영역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고용 및 노동, 개인의 역량, 부양, 노후 부담과 준비, 자녀의 장애 등 같은 영역이 제안되었다.

조사 항목의 내용은 기 수행되고 있는 여러 조사와 중복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인구조사는 각기 다른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는 분절적 항목이 하나의 조사에서 통합적으로 조사되면서, 인구의 동학적 측면을 고려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표 4-2〉 추가 영역 및 추가 항목

추가 영역	추가 항목
고용/노동 영역	고용 상태 근로시간 직장문화 재량과 자율성
역량(competence)	경제적 소득과 학력, 취업 여부와는 별도로 본인의 역량(competence) 전반에 대한 인식
어르신, 부모님 돌봄	부모님 부양 유무 경제적 부양 사회적 부양 부양에 대한 생각 가치

추가 영역	추가 항목
노후 부담 및 준비	노후에 대한 우려정도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를 위한 월 평균 저축액
인구이동	이사 경험 이사 계획 현 거주지 만족도
자녀 장애 유무	장애 유무 선천성/후천성 여부 장애 종류

자료: 필자 작성.

인구패널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으로 면접조사,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의 병행조사, 온라인조사 등 세 가지 조사 방법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91.1%가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면접조사는 57.8%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혼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조사 문항에 있어서 대면 조사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불응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한 불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 심해질 것이므로, 조사에 대한 관리는 대면 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하되, 조사 자체는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패널 자료를 구축할 때 행정자료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록센서스의 실행으로 인해서 행정자료를 통해서 인구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건강보험 DB 자료는 인구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강관련 다수의 행정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실제 표본 조사에서 제외하면 응답자의 응답 부담과 예산을 감소시키고, 해당 항목의 응답 정확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자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본격적인 인구패널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조사 대상자인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인구패널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즉, 출산력조사가 수행되는 해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출산력조사의 표본 중 약 1,000가구를 인구패널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출산력조사에서 적용한 조사구당 평균 1~3가구를 표본 가구로 추출하여 약 1,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약 1,000가구를 향후 3년간 인구패널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3년 뒤에 수행되는 다음 출산력조사를 인구패널조사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국제공동조사 참여 방안

그동안 인구 관련 국제적인 종단적 조사인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 FFS)」와 이후에 실시된 「세대 및 젠더에 관한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에 OECD 국가들의 상당수가 참가해왔다. 2021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과 비유럽국가를 포함하여 24개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 인구패널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출산력조사를 향후 인구패널조사로 전환하는 방법, 출산력조사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인구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

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 GGS 문항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 4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응답자의 과반이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구패널로서 기존의 출산력조사의 주요 문항을 포괄하여 새로운 개념 틀에 기초하여 변화 및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예산 등 여건이 가능하다면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 국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는 것에 합의된 결론을 내렸다. 즉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참여와 함께 필요 시 한국 문항을 부가조사로 실시하여 기존 출산력조사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표 4-3〉 2021 현재 GGS 참여 국가별 참여 수준 및 조사 방식

지역	국가	참여 상황
서유럽	오스트리아	예산 마련 중
	벨기에	예산 마련 중
	덴마크	2021년 본조사 실시
	핀란드	2021년 본조사 실시
	프랑스	2021년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2023년 본조사 실시
	독일	2021년 본조사 실시
	아이슬란드	예산 마련 중
	네덜란드	2022년 본조사 실시
	노르웨이	2020년 본조사 실시
	스웨덴	2021년 본조사 실시
	영국	2022년 본조사 실시

지역	국가	참여 상황
동유럽	벨라루스	2017년 본조사 실시, 2022년 사후조사(2회차 조사) 실시
	크로아티아	예산 마련 중
	에스토니아	2021년 사전조사 실시
	헝가리	예산 마련 중
	카자크스탄	2019년 본조사 실시
	라트비아	2018년 사전조사 실시
	리투아니아	예산 마련 중
	몰도바	2020년 본조사 실시
	폴란드	예산 마련 중
비유럽	캐나다	논의 중
	홍콩	2021년 사전조사 실시
	타이완	예산 마련 중
	우루과이	2021년 본조사 실시

자료: 필자 작성.

우리나라에 인구패널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의 강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전망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유럽 및 아시아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인데,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는 일, 가족, 복지, 남녀 관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간의 접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구축한다. 즉,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데이터는 인구 및 가족 역학의 원인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해 관계자에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 내용은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 연구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즉, 이전 버전의 데이터 수집과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과학적 질문과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질문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는 인구통계학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 신뢰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종단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은 국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통계 네트워크인 유럽 인구, UNECE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및 UNFPA (유엔 인구 활동 기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GGP 인프라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가치는 매우 높는데, 이는 각국이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보고, 고유성과 공유된 과제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는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성, 피임 및 의료 자율성과 두 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각각 SDG 5.6.1 및 SDG 3.7.1)인 충족되지 않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욕구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둘째, 공통적인 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중앙통제 팀(Central Hub)이 현장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한다. 이미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데이터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 높은 효용이 있다. 이는 국가별 데이터가 활

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일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서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는 응답자의 파트너쉽과 출산 이력을 포착하는 회고적 요소와 후속 조사를 통한 미래적 요소로 구성된 종단적 조사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개인 삶의 과정과 가족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개인들은 종종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생성 및 해체를 경험한다. 이러한 이력을 포착하는 것은 건강과 복지, 세대 간 교류 및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생애사에 관한 모듈은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기초조사(Baseline) 설문문의 핵심이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와 동거의 해체도 포착하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가족생활의 복잡성에 관한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요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데이터 파일에 포함되지만 (이 모듈을 중심으로 한) 조합된 (Harmonized Histories) 데이터에 포함되는데 이 데이터는 수많은 과학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가족생활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로 수행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나 가족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가족 및 출산율 조사는 한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면 조사이다. 이는 가족의 현재 상태를 포착하기에는 매우 좋지만 가족의 실제 역학 관계를 포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래 요소는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그들의 맥락과 상황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혼 후에 얼마나 빨리 재혼하는가?:

비혼 동거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직업의 불확실성이 가족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업이 세대 간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녀의 출생이 가족 내 성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미래 요소는 기준에서 출산 의도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3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 중 일부는 종단적 데이터로 대답할 수 있지만, 삶의 동적 특성과 가족 형성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래 차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검증된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기준 및 후속 조사문항을 사용하게 된다. 개별 국가는 국제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설문 문항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 단, 각국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작업 구현을 위해 중앙 통제팀(Central Hub)과 협력한다. 설문 문항의 번역 관리 도구를 포함하여 중앙 통제팀에서 제공하는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코딩 설문지 및 현장 작업 설정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중앙 통제팀과 공동 작업(서비스) 계약 및 데이터 계약 체결을 통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나중에 중앙 통제팀에 등록된 학술적 목적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본(조사 대상자)은 각 국가에서 관리한다. 표본추출, 응답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정보 포함) 유지 및 패널 유지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각 국가에서 관리하고 중앙 통제팀과 공유되지 않는다.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참여하게 되면 개별 국가는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8~79세 남녀이며 전국을 대표하는 약 1만 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조사 방식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대면 면접 등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GGP에서는 사전 코딩된 설문지, 번역 관리 도구, 조사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을 한다. 이전 현장 작업 단계(번역, 사전 테스트 지원 등), 현장 작업 단계(현장 작업 모니터링 등), 현장 작업 단계(기본 데이터 파일 준비, 문서화 및 데이터 보관 등)마다 지원한다.

이러한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참여하면 장점이 있으나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저출산의 원인은 국가나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과 GGP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의 조사항목이나 모듈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조사표를 추가하여 한국 고유 상황에 맞는 조사항목 등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가 지나치게 젠더이슈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형 인구패널을 설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등이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구패널은 기존 패널과 중복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도입 당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4〉 인구패널의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참여 검토 방안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방안1	미 참여(단, 일부 조사항목 또는 모듈에 한해 개별적으로 반영)	한국적인 인구상황에 부합한 인구패널 설계 및 결과 도출 가능	국제 비교 약화
방안2	부분 참여(공동 조사표 반영 하되, 한국적인 내용에 대해 부가조사표 추가)	국제 비교, 다양한 항목 간 연계 분석 등 가능	조사 내용의 증가에 따른 응답 부담 증가, 인구패널로서 성격 약화, 국내 여성가족패널과의 중복 우려
방안3	완전 참여	국제 비교, GGS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	인구패널로서 성격 미비, 국내 여성가족패널과의 중복 문제 야기

자료: 필자 작성.

3. 예산

인구패널은 예산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횡단적인 조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횡단적 조사는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매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패널조사의 예산은 조사 자체를 위한 예산만을 감안해도 작지 않다. 특히 문항의 난이도와 분량, 조사 업체, 조사 방식(가구 내 가구원 전체 조사 방식인지 개인 조사 인지), 조사 대상자의 접근도, 조사 인센티브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횡단적 조사는 매번 서로 다른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동일한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표본 가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패널 담당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예산 측면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인구패널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인구패널을 정부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인구패널은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들, 즉 교육, 아동 및 청소년, 청년, 노동, 고용, 의료, 복지, 여성, 가족, 소득보장, 재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출산 등을 포괄하는 인구를 주제로 한 국가패널을 정부 예산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국가 예산을 통해 인구패널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부가 인구패널 실시기관을 변경하거나 조사항목 선정 등에 있어서 많이 개입하게 될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구패널의 일관성 또는 시계열의 장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국가 예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예산을 합해서 인구패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구패널을 설계하되, 정부의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재정 확보가 안정적이라 인구패널을 일관성 있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입장을 모두 조사에 반영하는 경우 조사응답자의 피로도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인구패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인구패널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항목 등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인구패널을 장기적으로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할 때, 조사 실시, 표본 가구 관리, 담당인력 운영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안 1>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방안 2>를 고려한다. 만약 <방안 1>과 <방안 2>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안 3>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 연구과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들을 예산 활용차원에서 인구패널조사에 통합·배치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표 4-5> 인구패널 도입 방안: 주관기관 및 조사기관 측면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방안1	정부 위탁사업	- 재정 안정 - 패널 지속가능성 확보	- 정부 개입에 따른 패널 실시기관, 조사항목 등의 가변성 증가
방안2	절충 (정부 예산+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예산)	- 예산 부담 분담	- 인구패널 성격 혼잡성 증가
방안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사업	- 패널 융통성 확보	- 예산 부족 등에 따른 패널 지속가능성 저하

자료: 필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 5 장 결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화, 고착화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낮은 수준인 0.8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며, 15년 이상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의 세부적인 목표부터 거시적인 패러다임까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을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세대에 따라 급변하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인구패널 실시를 명시하였으나, 아직 인구패널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수행된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김종훈 외, 2018)」에서는 출산력 패널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좀 더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패널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기화하고 있는 인구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인구동학적(population dynamics) 통계는 인구 규모, 인구구조, 인구 분포 등 인구정학적인 요소들을 변동시키는 결혼, 이혼, 출산, 사망과 같은 사건(event)에 관한 통계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를 근거로 수행할 수 있는 인구패널조사는 인구정학적인 모습(인구 규모, 구조, 분포 등)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구동학적인 사건(혼인, 이혼, 출생, 사망, 이동 등)들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동적인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패널조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만혼화와 비혼화 및 저출산 등 새로운 인구 현상이 심화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되었

고, 2005년부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 조사들의 조사항목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과 2009년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기존 조사항목을 수정해서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패널조사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실태조사는 횡단적인 조사로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사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 당시의 인구동학적인 상태에 대해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가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즉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다. 둘째, 패널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사들은 각각 고유한 목적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조사항목들을 선정 및 배치한 관계로 저출산 등 인구 변화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패널조사들은 핵심적인 인구 현상인 출생, 사망, 인구 이동 관련 사항과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족의 형성 및 변화 과정 등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 셋째, 출생, 사망, 인구 이동 같은 주요 인구 현상을 포착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패널조사는 주요 인구 현상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구성 시에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학적 사례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연령대에 대한 과대표집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패널이 인구 현상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지만 결정적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 현상과 직결된 항목들을 조사 내용에 포함한 패널을 구축하여 인구 현상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혼, 출산 등 인구동학적인 요인들의 변화는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간주된다. 그만큼, 저출산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특화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인구동학 요인들의 변화가 동적인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등과 강한 인과관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종단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요컨대, 인구패널조사는 가족의 교육,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육아와 가족 돌봄, 가사활동, 가족관계,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생활실태와 혼인, 이혼, 출산, 이동,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상황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인구동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동학적인 상황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특성 변화 간의 상호연관성, 즉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결혼, 출산, 이동의 결정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가치관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집단에게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패널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인구정책 등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인구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인구패널조사의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인구동학적인 변화의 특징 및 원인들을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셋째,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DB(database)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인구 현상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다섯째, 인구, 가구 등 미래 인구정확적인 요인들의 향후 변화에 대한 가정

(시나리오)을 설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인구패널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출산력조사를 향후 패널조사로 전환하는 방법, 출산력조사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인구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 GGS 문항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의 네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응답자의 과반이 Generations & Gender Program(GGP)에 참여하여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실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인구패널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GGS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GGS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전망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유럽 및 아시아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인데, GGS는 일, 가족, 복지, 남녀 관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간의 접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구축한다. 즉, GGS 데이터는 인구 및 가족 역학의 원인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해 관계자에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는 GGS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이기에 가능하다. 둘째, 조사 내용은 GGP 연구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즉, 이전 버전의 데이터 수집과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과학적 질문과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질문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GGS는 인구통계학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 신뢰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종단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GGP는 국제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통계 네트워크인 유럽 인구, UNECE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및 UNFPA (유엔 인구 활동 기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GGP 인프라에 참여하여 GGS를 실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가치는 매우 높는데, 이는 각국이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보고, 고유성과 공유된 과제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GGS는 최근에 중요시 되고 있는 성, 피임 및 의료 자율성과 두 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 (각각 SDG 5.6.1 및 SDG 3.7.1)인 충족되지 않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욕구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둘째, 공통적인 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중앙 통제 팀(Central Hub)에게서 현장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GGS 데이터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 높은 효용이 있다. 이는 국가별 데이터가 활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일 것이다.

종단적인 조사로서 인구패널은 일반적인 횡단적인 조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횡단적 조사는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매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둘째, 횡단적 조사는 매년 서로 다른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인구패널은 동일한 표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표본 가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패널 담당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구패널 구축 및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1회성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는 패널 구축 이

후 표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충분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모든 패널은 패널 가구원의 사망, 이사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 노령화로 인한 노후화, 장기조사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패널 표본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패널 손실은 표본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표본의 이탈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패널은 원가구로부터 독립, 결혼, 이혼, 이사 등의 사유로 분가가구가 형성된다. 분가가구를 추적조사하는 것은 다양한 인구 현상에 대한 세대 간 동태적 변화와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패널조사는 분가가구 추적조사로 인해 분가가구의 분가가구까지 장기간 자료가 축적되면 원표본보다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가가구 표본이 축적되면 표본손실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구패널이 이러한 분가가구의 분가가구까지 추적하여 여러 세대를 포함한다면 조사 대상 중 저연령에 해당하는 표본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패널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패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일정 정도 표본 이탈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패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표본 유지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표본을 추가하는 일은 새로운 통합표본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원표본을 잘 유지하는 것과 분가가구의 추적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인구패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인구패널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

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즉 인구패널의 생존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방안 중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방식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국의 코호트 연구(British Cohort Study)와 독일의 가족패널(Panel Analysis of Institute Relationships and Family Dynamics) 같은 코호트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코호트 패널 자료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헌 자료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최신 자료와 국내외 각 조사 담당자들과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상세하게 고찰하여 인구조사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 구성열(2005). 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한국인구학, 28(2), 1 - 32.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 권태환, 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훈, 박종서, 이소영, 최인선(2018).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도세록, 오미애, 신창우, 이난희, 신은숙, 서문희, 손창균(2013). 출산·보육 통계 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김동진, 김문길, 이삼식, 이상림, 이윤경, 장영식, 양지윤, 계봉오, 박성재, 박형민, 이민아, 차우규(2016). 인구정책 관련 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제처(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제29조.
- 신동균(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 여유진, 오미애, 이원진, 우선희, 이병재, 한겨레, 손창균, 송지은, 신재동(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 출산력 변화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박현경, 손인숙, 손호성, 오수영, 최용성(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장영식, 이연희, 김나연, 최성용, 손창균, 조남훈, 변용찬, 정경희, 이삼식, 조영태, 고경환, 도세록, 한영자, 신윤정, 신창우, 문병윤(2008). 인구패널 및 DB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재선, 김영란, 송치선, 한진영, 손창균, 차지영, 이진숙, 임연규(2017).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이동선, 송치선, 박건표, 이진숙, 박송이, 손창균(2020). 2020년 여성가족 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2021). 2020년 출생 통계.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 Q&A.

통계청(2020B).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구축(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20).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KLoWF 여성가족패널 1~7차 웨이브 User's Guide.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dres Vikat, Zsolt Spéder, Gijs Beets, Francesco C. Billari, Christoph Bühler, Aline Désesquelles, Tineke Fokkema, Jan M. Hoem, Alphonse MacDonald, Gerda Neyer, Ariane Pailhé, Antonella Pinnelli and Anne Sola. (2007)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G) :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processes in the life course.' Demographic Research 17, pp. 389-440.

Festy, P. and Prioux, F. (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New York.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Philipov, D., Liefbroer, A, Klobas, J.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UN (2019).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identity management systems: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p.23.

UN Statistical Commission (1994),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Extract from the report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n its Special Session, held in New York 11-14 April 1994.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4, Supplement No. 9.

UNECE. (2002).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Survey Design.

url 검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http://survey.keis.or.kr/klosa/klosa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소개

<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에서 2021. 4. 30. 인출.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7&dataLvCd=7_6&pagenum=1에서 2021. 4. 30.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1. 11. 30. 인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http://www.kreis.or.kr>에서 2021. 11. 30. 인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http://survey.keis.or.kr/goms/goms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사업체패널조사 <https://www.kli.re.kr/wps/index.do>에서 2021. 11. 30. 인출.

여성가족 패널조사 <http://klowf.kwd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여성인력 패널조사/여성관리자 패널조사 <http://kwmp.kwd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main.do?cate=1>에서 2021. 4. 30. 인출.

인구주택조사홈페이지 <https://www.census.go.kr/>에서 2021.12.17. 인출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http://www.krivet.re.kr/ku/ha/kuCCADs>에서 2021. 11. 30. 인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https://edi.kead.or.kr/>에서 2021. 11. 30. 인출.

재정패널 <http://panel.kipf.re.kr>에서 2021. 11. 30. 인출.

청년패널조사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에서 2021. 11. 30. 인출.

청소년패널조사 <http://archive.nypi.re.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가구패널조사 <https://homepanel.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http://www.krivet.re.kr/ku/ha/kuCAADs>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복지패널조사연구 <https://www.koweps.re.kr:442/probe/result.do>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아동패널 <http://panel.kicce.re.kr>에서 2021. 11. 30. 인출.

한국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에서 2021. 11. 30. 인출.

Generation & Gender Programme <https://www.ggp-i.org/about/>에서 2021. 4. 30. 인출.

GGP <https://www.ggp-i.org/about/organisation/>에서 2021. 5. 17. 인출.

GGP,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https://www.ggp-i.org/form/publications/>에서 2021.12.17. 인출.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 (20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Appendix. p.1 file:///C:/Users/kihasa/AppData/Local/Temp/BNZ.61d68f4f687347cc/2011-07-15%20217173%201016906%20Appendix_1.pdf에서 2021. 12. 17. 인출.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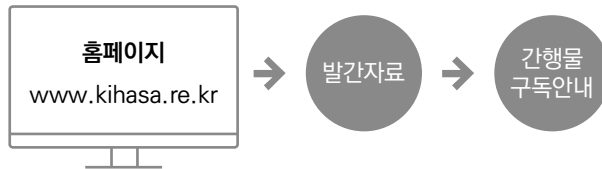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